

---

# 경북 북부지역 산림 및 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장 우 환

## 목 차

### ■ 요약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 II. 산림부문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내외 활용 사례

1. 산림·임산자원 활용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동향
2.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임산자원 수요 전망
3. 국내외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례

#### III.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개발여건과 활용상의 문제점

1.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현황과 개발 여건
2.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활용 실태
3.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활용상의 문제점

#### IV.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비전과 활용 전략

1. 산림·임산자원의 SWOT 분석
2. 북부지역 산지·산림·임업의 비전과 발전방향
3.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전략

#### V.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1.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공원 조성
2. 생태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유지·보호·관리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 육성
4.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5. 합리적인 산지이용 및 쾌적한 산촌 정주공간 조성
6.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의 정비

### ■ 참고문헌

- <부록 1> 산촌종합개발 관련 법규
- <부록 2> 산촌개발사업 추진요령

## 요 약

### ■ 연구배경 및 목적

-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 나라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내륙지역과 동해안지역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수는 경북 전체의 약 1/3에 불과한 인구과소지역임.
- 경북 전체 산림면적의 약 2/3를 점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산업구조가 농림업 중심으로 취약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생산액도 저위의 경제적 낙후지역이며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나 사회기반시설도 양호하지 못함.
- 경북 북부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한 인구과소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인 동시에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 활력이 상실된 지속적인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방치된다면, 취약한 경제구조와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경북 전체 나아가 전국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감소나 발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임.
- 경북 북부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북내 타 지역보다 여건이 불리하다고 방치해온 산림·임산자원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
- 경북 북부지역 관내에 있는 국립공원 4개소, 도립공원 2개소 등 매력적인 산림 자원 뿐만 아니라 봉화의 준양목, 울진의 금강송 등 울창한 숲을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주5일근무제와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임산자원을 산림휴양, 산림농업(Agro-forestry)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첫째, 경북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개발여건과 활용 실태, 활용상의 문제점, 국내외 활용 사례 등을 파악하고, 둘째, 경북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향후 비전과 효율적 활용 전략을 제시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경북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주요 연구내용

- 경북 북부지역은 임야율이 75.2%인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서 백두대간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태백산·소백산·가야산·주왕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림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이 영남내륙권의 중심지로서 강점을 살려 산림생태·휴양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유령림 단계인 산림자원을 보다 잘 가꾸고 지속적으로 경영·관리하여 미래지향적인 산림경관림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산지·산림·산림산업·산림서비스·산촌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 임정의 실현”이라는 임업비전 설정이 필요함.
- 경북 북부지역 임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관리하고 둘째,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림산업으로 육성하며 셋째,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할 것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 임정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공원의 조성: 내륙영남권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가진 경북 북부지역 임업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도록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개념에 의한 산림생태공원 조성
- 둘째, 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산림생태계의 보고이며 녹색청정지역으로서 경북 북부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생태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유지·보호·관리
- 셋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의 육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도·임업기계 등의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형 첨단 산림산업을 육성

- 넷째, 경북 도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산림휴양·관광·여가 공간의 제공 등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 다섯째, 합리적 산지이용 및 쾌적한 산촌 정주공간 조성 : 경북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북부지역의 합리적 산지이용과 도민의 생활·여가·문화 공간으로서 쾌적한 산촌 정주공간 조성
- 여섯째,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정비: 21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임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정비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 나라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내륙지역과 동해안지역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2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북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면적은 경북 전체 면적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29.4%에 불과하다. 경북 전체 시·군수의 약 절반을 점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경북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수는 경북 전체의 약 1/3에 불과한 인구과소지역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평균 임야율은 75.2%로 경북의 평균 임야율 72.2%, 전국의 평균 임야율 65% 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경북 전체 산림면적의 59%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내 총생산액(GRDP)은 경북 전체 GRDP의 19.6%에 불과하다. 경북 전체 산림면적의 약 2/3를 점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광·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고 농림업 비중이 높아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832만원으로 경북 전체 1인당 평균 소득의 약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산업구조가 농림업 중심으로 취약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액도 저위의 경제적 낙후지역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나 사회기반시설도 그리 양호하지 못하다. 낙후된 생활환경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북부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16.5%로 경북 전체 재정자립도 30%,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 54.6%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낙후된 생활환경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젊은 인력 또한 부족하다. 최근 10년간 북부지역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9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도 18.7%로, 경북의 평균 노령인구비율 12.8%보다 높다.

이와 같이 경북 북부지역은 산간오지에 위치한 인구과소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인 동시에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 활력이 상실된 지속적인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 북부지역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된다면, 취약한 경제구조와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경북 전체 나아가 전국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감소나 발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내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생존전략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 북부지역이 그동안 경북내 타 지역보다 여건이 불리하다고 방치해온 산림·임산자원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부지역 관내에 있는 국립공원 4개소, 도립공원 2개소 등 매력적인 산림자원 뿐만 아니라 봉화의 춘양목, 울진의 금강송 등 울창한 숲을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5일근무제와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임산자원을 산림휴양, 산림농업(Agro-forestry)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 개발여건과 활용실태를 살펴보고,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임산자원 활용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내외 활용사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산림부문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임산자원의 활용 전략과 국내외 활용사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경북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개발여건과 활용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현황과 개발여건, 현재 활용실태와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향후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림·임산자원의 SWOT분석을 통해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비전과 발

전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림·임산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산림농업(Agro-forestry)활성화 방안, 특히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산림·임산자원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였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활용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경북도청 산림과를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제2장

### 산림부문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내외 활용 사례

#### 1. 산림·임산자원 활용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동향

##### 가. 과거의 산림·임산자원 활용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산림·임산자원이 풍부한 산림국가이었지만, 일제식민지시대와 6·25전쟁 등으로 인해 산림·임산자원이 극심하게 훼손되었다. 산림·임산자원의 훼손에 따른 홍수피해, 산사태 등의 재난이 빈발하였기 때문에 1960년대 산림정책은 황폐해진 국토와 산림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치산녹화정책이 최우선적 국가과제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1973년~'78년), 제2차 치산녹화10년계획(1979년~'87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세계적인 녹화성공 국가로 인정받았다. 동기간 206만ha의 조림과 황폐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국토 및 산림자원의 복구를 위한 조림·사방사업 등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규제행정이 주요한 임정수단으로 채택되었다.

제1차, 2차 치산녹화계획의 성공에 이어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88~'98)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1세기 선진 임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산지자원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기간 303만ha의 육림과 임도, 유통시설을 확충하였다. 제1, 2차 치산녹화 계획에 의한 녹화를 바탕으로 산지자원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경영임정의 여건조성을 위한 전환기 개혁임정을 추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2차 치산녹화 계획과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을 통해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에는 성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서 임업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약 515만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재생산량은 약 1,428천m<sup>3</sup>으로 국내 목재 총 수요량 대비 국산재 자급률은 약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임산물 생산액은 약 5,170억원으로 GNP대비 약 0.2%에 불과하다. 국토

와 산림자원의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대부분의 산림이 아직 키우고 가꾸어야 할 청소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분간 육림위주의 산림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거 임업의 현실과 임정을 종합적으로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임업발전을 위해 우리의 산림과 임업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세기 절대녹화와 산지의 자원화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주목적으로 한 산림정책에서 환경과 생태계를 중시하는 경제와 환경의 양립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지구환경에 있어 산림문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함에 따라 국내의 환경단체에서도 산림과 임업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산림은 다양한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명자원이므로, 산림자원은 현세대와 후세대의 사회·경제·환경·문화 및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임업은 보속사상에 입각한 자원보속체제의 실현을 지상과제로 설정하였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산림기능은 점차 경제적 기능에서 공익적 기능으로, 또한 최근에는 이들 기능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산림정책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본정책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산림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임업은 생산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분야보다도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체로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지만, 그 가운데는 정책최고 책임자의 지시로 시책 방향이 변경된 사업들이 간혹 있다. 이런 정책 변동은 정책최고 책임자의 잦은 교체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책임자의 교체에도 꾸준한 정책추진이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외재 위주의 목재시장 하에서 우리 임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제를 근대화하고, 임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임업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림산업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임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벌채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아직 키우고 가꾸어야 할 육성단계임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합경영을 통해 임업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임업생산을 담당할 농산촌 주민들은 필요가계비를 농업이나 목재생산에 의한 소득 외에도 산림농업이나 단기소득작목과 같은 겸업소득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산촌은 활성화되고, 임업은 재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는 산림소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산림산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치산녹화와 자원화를 어느 정도 완료한 현시점에서 임업의 산업화가 강조될수록 임업에 대한 국가보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업부문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회계나 재정투융자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 등 새로운 투자 재원을 찾아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유림은 물론이고 사유림에 대한 산림사업도 정부의 재정투자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림투자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유림의 경우 임업진흥촉진법에 채택되어 있는 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시켜 산림경영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임협 등이 산림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주의 경영 파트너로서 도시의 자본을 산림으로 끌어들이는 분수유림제도를 사유림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산림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을 높여서 지방임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는 산림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 사업과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유림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 움직이고 있다. 형식상 중앙의 산림기본계획을 기초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sup>1)</sup>.

하지만 내용상 산림기본계획이 시·군단위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상향식으로 작성된

---

1) 현행 산림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매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매10년마다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작성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산림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이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갖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역산림계획을 바탕으로 도 단위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산림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20세기 범국민적 노력과 3차에 걸친 산림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마련된 산림자원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산림으로 가꾸기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산림의 80%이상이 유림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육림중심의 산지자원화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림자원을 경제자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임업생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국산재의 공급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나, 법률·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전문경영인의 육성도 필요하다. 국민의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20세기에 녹화했던 산림자원들을 경제림화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나. 미래 산림·임산자원의 활용 전망

21세기에는 산림을 둘러싼 임업과 임산업 분야에서도 주요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1세기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포함한 임업과 임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생명공학과 같은 임업과 관련된 과학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진보가 임업과 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시대로 인한 사회경제의 개념과 형태의 변화로 임업과 임산업의 경쟁력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피로부터 지구촌을 구하기 위해 21세기에는 국가간의 환경협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러한 국제협약은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국제기후협약이 성사된다면 일정한 규모의 산림을 보유하지 않고는 자국내의 산업규모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임업은 다른 산업을 위한 기반산업이 될 것이고 국

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있어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임업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산림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21세기에는 산림보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에는 천연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도 이유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환경농산물에 대한 무역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국내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도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농산물과 천연임산물의 생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환경적으로 가장 건전한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농업의 확대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이 산림자원이기 때문이다. 즉 환경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길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천연소재로서 목재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목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천연소재로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목재는 재생가능하고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므로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수요확대의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물질을 순환시킴으로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산업, 즉 물질순환적 또는 물질대사적인 산업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물질대사적인 산업이고 농업과 혼합한다면 완벽한 물질대사적인 산업이므로 농업과 결합된 임업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에이즈나 암과 같은 인류가 고통 받고 있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은 에이즈나 암과 같은 불

치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임업과 임산업의 산업화에 열쇠가 되는 것은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도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 임업에 적용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임업의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이를 산업화하는 데 대한 수요가 적었고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와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임산물과 목재소재, 그리고 산림자원이 공급하는 약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기술개발이나 진보 가운데 임업과 임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재개발과 생명과학에 관련된 기술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결국 임산물과 목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세부적으로는 소재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 환경관련 기술, 그리고 유전공학에 관련된 기술 등이 될 것이다.

분야별로 기술개발의 역사를 분석해 보았을 때 21세기에는 임산물의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중점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즉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와 전기에 관련된 기술은 주로 19세기에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철강, 항공, 전기와 같은 중공업에 영향을 끼쳤고, 20세기에 시작된 물리학에 관련된 기술개발은 전자, 통신, 컴퓨터 산업에 도움을 주었다.

21세기의 기술혁명은 생물학 분야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의학과 농림업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21세기에 유전자의 합성이나 복제와 같은 생명공학의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됨으로서 임업은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유전공학의 기법을 이용하여 병충해에도 강하고 성장도 빠르면서 목재를 이용하기에도 적합한 수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장이 빠른 수종을 개발할 수 있다면 임업의 아킬레스건인 수익성 증대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출기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산업화가 가능하다면 산림생태계에 있는 엄청난 생물자원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산림생태계에는 인류가 필요로 하

는 자원이 많은데 적절한 추출기술에 배양기술이 접합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발전될 기술은 임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신약의 개발로 산림병충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어계측기술의 발달은 산림병충해의 방제뿐만 아니라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재기술의 발전은 임산물의 이용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할 것이다. 이미 임산업에서는 원목에서 합판으로, 합판에서 다시 보드류로 변모하는 소재기술의 변천을 보았지만 21세기에 소재산업이 극도로 발달하게 된다면 임산업은 더욱 융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천연제품을 대체한 석유제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소재가 석유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량을 고려할 때 목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재기술의 발달은 목재자원의 이용에 큰 변화를 줄 것이고 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촌도 21세기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산촌개발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 졌다. 산촌에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했고 생활에 필요한 문화시설과 자녀들의 교육시설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촌도 농촌의 개발형태와 비슷해야만 했다. 산촌개발이 잘된다 하더라도 산업사회에서는 집단화된 주거지가 유리하고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산촌은 상대적으로 살기가 좋지 않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산촌은 매력적인 주거지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농업과 임업이 통합적으로 경영되면서 농지와 산지를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촌은 지리적으로 농산촌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산림과 농지로 둘러싸인 산촌은 21세기의 경제활동방식에 있어서 경제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통신시설과 정보시스템이 발달할 21세기에는 산촌지역에서도 도시지역에 못지 않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산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주거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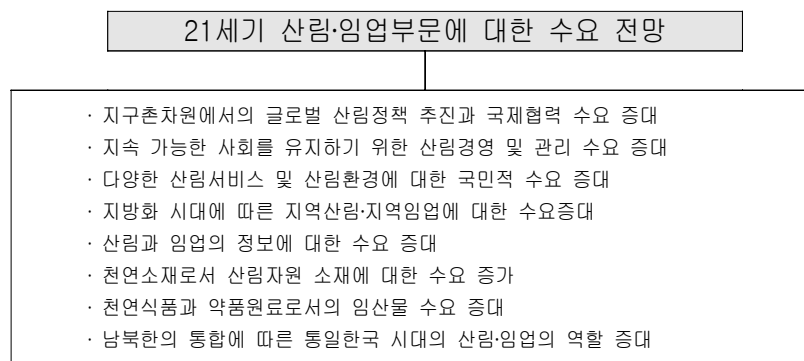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산촌지역은 20세기 보다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시대에 있어서 국토의 집중개발에 의한 개발방식으로는 개발효과가 가

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개발효과가 낮은 오지인 산촌은 소외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개발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숲의 잠재력을 지닌 산촌지역은 지자체가 가장 선호하는 개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임산자원 수요 전망

우리 산림·임업의 현실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천년은 산림·임업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가? 새로운 천년에 예상되는 산림·임업에 대한 수요를 정리하여 보면 <그림 2-1>와 같다.

첫째, 지구촌차원에서의 글로벌 산림정책 추진과 국제협력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사막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열대림 벌채 제한, 탄소배출 허용량 규제<sup>2)</sup>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지구적 차원의 산림역할이 중시될 것이다. 지구촌 환경과 관련된 탄소배출 및 정화문제에 있어 자국 자정능력에 비례한 자연개발권의 부여 및 각종 혜택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파트너십의 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임업부문이 쾌적한 지구촌 환경만들기의 인증자(Certifier)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3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지구촌차원에서의 글로벌 산림정책 추진과 산림·임업부문의 네오-파트너십(NEO-Partnership) 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2-1> 새로운 천년의 산림·임업부문에 대한 수요 전망

2) 1997년 12월 교토의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이행기간에 90년기준 국별차등화를 기하여 감축 8%에서 증가 10%까지 감축율을교토의정서 Annex B에 명기하고 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산림경영 및 관리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신물질 개발 수요의 충족을 위한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와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다양한 자연생태에너지원 및 재생가능한 자원의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의 기능 증대와 경영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산림서비스 및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생태공원, 테마공원 등의 휴양 위락공간과 천연 산림박물관, 산림체험장 등 전통문화 학습공간 등에 대한 생태적 산림이용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청정산업, 미래 첨단산업, 물질대사적 산업 등의 친환경적 산업을 위한 산지이용 수요가 증대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생활의 터전으로서 산촌 및 산림도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도시내 산림 및 녹지공간, 도시근교림 등 녹색공간으로서의 도시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넷째,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산림·지역임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산림·지역임업의 역할도 증대할 전망이다. 민간 및 외국자본을 동원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와 지역이기주의·지역경영마인드가 확산되고, 산림정책 형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섯째,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산림·임업부문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지식, 정보를 활용한 산림·임업부문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부각될 전망이다. 산림·임업부문의 생산구조가 기존의 토지·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지구촌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 정보를 활용한 산림·임업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지구촌 정보망을 활용한 새로운 유전자원과 신소재 개발의 무한한 창고로서 산림·임업부문의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전망된다.

여섯째, 천연소재로서 산림자원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천연식품과 약품원료로서의 임산물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콘크리트문화에서 목재문화로의 변화에 따른 목재의 친자연적 생활수요가 확대되고, 목재이용·가공기술의 발달로 친자연적 소재로서의 목재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제품 등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대체재로서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이 진전되고, 추출기술의 발달에 따라 천연식품과 약품원료로서의 임산물 수요가 중요하게 부각할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의 통합에 따른 통일한국 시대의 산림·임업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다. 남북한의 통합을 대비한 북한산림·임업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대하고 남북 산림·임업부문의 교류가 증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한국 시대의 임정에 대한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의 산림·임업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임업부문이 담당해야할 역할을 정리한 내용이 <그림 2-2>이다.

첫째, 산지자원은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보전·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으로 통합관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자원은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첨단 산림산업의 생산·경영기반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산림산업은 환경·생명·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림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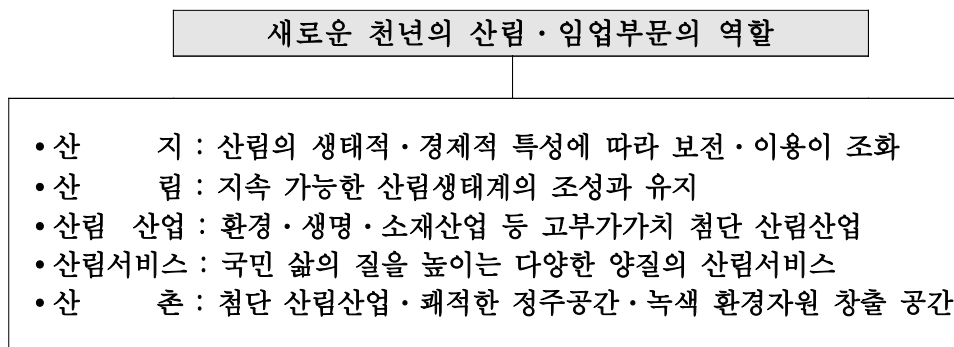


그림 2-2. 새로운 천년의 산림·임업부문의 역할

넷째, 산림생태계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휴양·레크레이션 등의 산림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촌은 첨단 산림산업의 기지이자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그리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녹색 환경자원 창출 공간으로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국내외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례

#### 가. 국내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까지 제1차, 2차에 걸친 치산녹화계획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산림정책의 주요목적이 조림, 육림 등을 통한 산림녹화가 지상과제였다. 헐벗은 산지를 통해 연례행사처럼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업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녹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국내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88~'98)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이 수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인공조림의 성공으로 청소년기에 도달한 산림을 산림휴양림으로 활용하거나, 인공조림지 임간에 더덕, 약초 등의 임간재배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5년 산촌진흥법을 통해 시작된 산촌진흥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95년 강원도 춘천시 지암리에서 산촌종합개발 시범사업이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림이 유럽이나 일본 등의 임업선진국 처럼 영급이 높고 울창한 숲으로 조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업선진국에 비해 산림·임산자원의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국내 산림·임산자원의 활용사례는 2005년 수립된 봉화군 춘양목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과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산촌마을 사례를 들 수 있다.

2005년 수립된 봉화군 춘양목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은 브랜드화된 춘양목이라는 산림·임산자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계획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산촌마을은 산간오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임산자원을 활용한 산촌체험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로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봉화군 춘양목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 사례

- 춘양목은 우리나라와 봉화군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양목을 봉화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결과 봉화군

발전에 대한 공헌도는 매우 낮은 실정

-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춘양목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의 중장기 비전으로는 「춘양목 100리 길 조성」을 춘양목 랜드마크(Choon Yang Pine-tree Land-Mark)로 개발함으로써 「봉화군 장소판촉(Place Marketing)」의 거점(Hub)으로 육성할 필요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춘양목을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하였음(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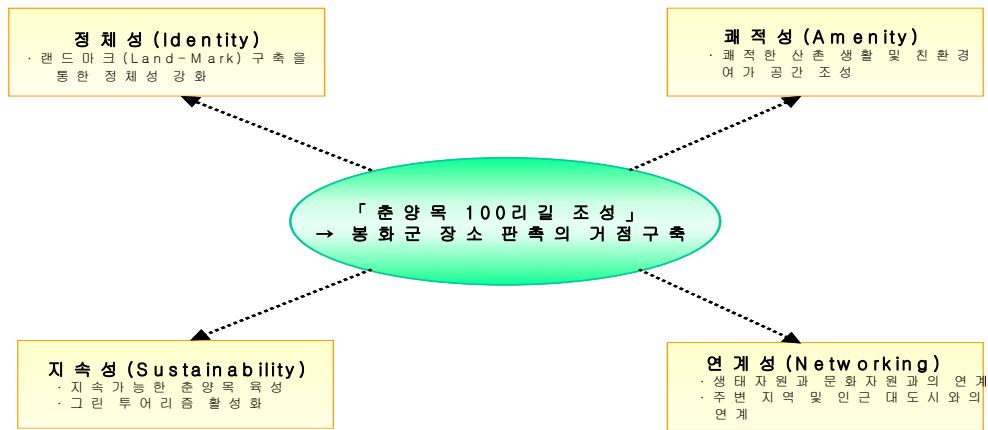


그림 2-3. 봉화군 춘양목을 활용한 지역개발계획의 목표

- 소광리, 청량산,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춘양목벨트화와 연계하여 춘양목 100리길 공간조성계획을 수립(그림 2-4, 2-5, 2-6 참조)
- 「춘양목 100리 길」 조성을 통하여 춘양목 랜드마크(Choon Yang Pine-tree Land-Mark)로 개발함으로써 봉화군 장소판촉의 거점(Hub)으로 육성
- 춘양목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린 투어리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소득증대
- 전국에서 유일하게 춘양목의 특화된 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특히 문수산 춘양목 자연교육·관찰원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춘양목의 교육·홍보효과를 극대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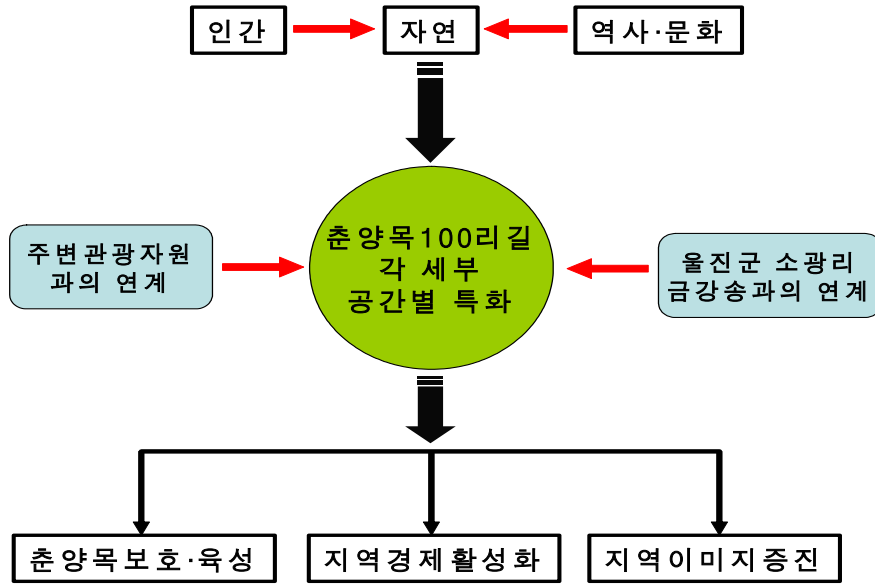


그림 2-4. 춘양목 100리 길 계획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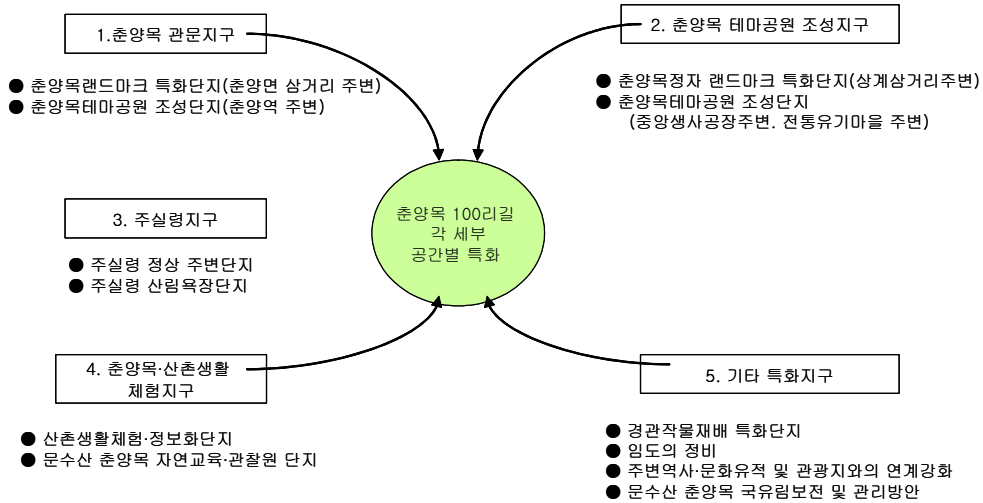


그림 2-5. 춘양목 100리 길 각 시설지별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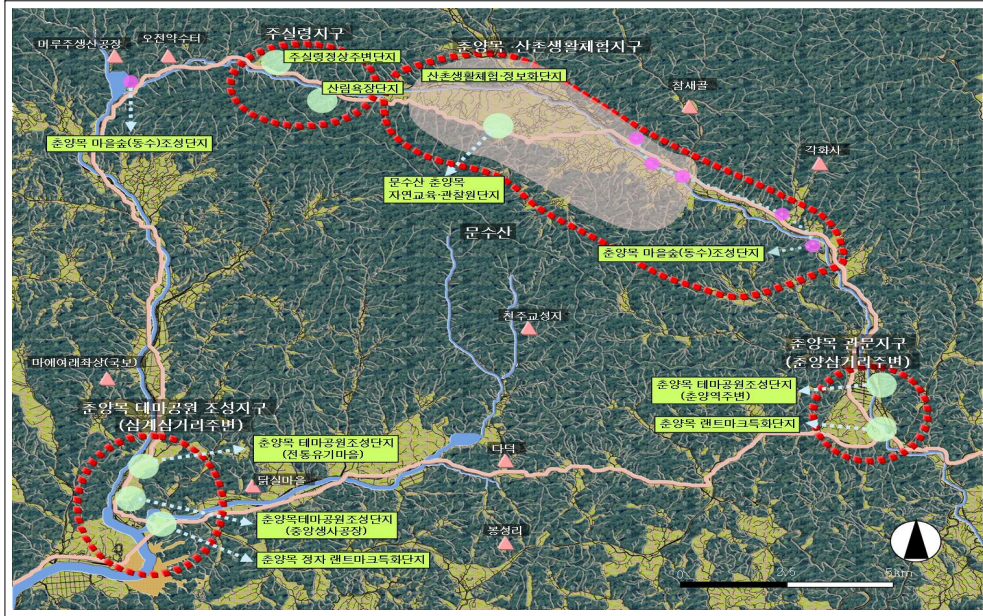


그림 2-6. 춘양목 100리 길 공간구상도

2) 산림·임산자원을 활용한 산촌휴양마을 사례(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 산촌마을은 산간오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총 6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드미 마을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임산자원을 활용한 산촌체험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드미 산촌마을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사체험, 생태체험, 삼굿구이 체험, 산나물 뜯기 체험, 옥수수 따기 체험, 썰매타기 체험 등 연중 가능한 체험활동과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그림 2-7~2-12 참조).

한드미 산촌마을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체험활동은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소백산의 철쭉제, 해맞이 축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휴양객과 등산객이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마을과 도시회사가 자매결연을 맺는 1사1촌 행사로서 송파구청, 삼성코닝정밀, KBS 교향악단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드미 산촌마을은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지도자와 주민이 단합된 결속력으로 정보화마을(행자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마을중

합개발사업(농림부) 등의 연관사업을 유치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결과 한드미 산촌마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1년 연간 150명에 불과하던 마을 방문객이 사업시작후 2004년 연간 4,600여명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마을주민의 평균소득은 2001년 15백만원에서 2004년 약 9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표 2-1).

<표 2-1> 한드미 산촌마을의 방문객수 및 소득 증가 현황

구 분	사업전(2001년)	사업후(2004년)	비 고
방문객수	150명	4,600명	
소 득 액	15백만원	94백만원	



그림 2-7. 산촌체험 산막



그림 2-8. 마을 숲과 정자



그림 2-9. 마을내 동굴 입구



그림 2-10. 산촌체험 마당



그림 2-11. 대통령 1일 산촌체험



그림 2-12. 산촌체험 활동 현장

#### 나. 일본의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사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임목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미에현 나바시리 카미니타니정에 있는 ‘아까메의 숲(赤目の林)’의 경우는 숲을 생태적으로 이용하는 에코리조트와 숲을 치료목적으로 이용하는 숲 요양소의 활용사례이다. 한편 일본 니이가타현 미나미우우노마쿤 유자와마찌에 있는 ‘만남의 고향(ふれあいの郷)’의 경우는 일본의 풍부한 국유림을 도시민에게 휴양지로 분양하여 도시민의 숲에 대한 정주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도시민을 이용한 국유림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사례로서 아까메의 숲(赤目の林)과 만남의 고향(ふれあいの郷)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까메의 숲(赤目の林)

아까메의 숲이 위치한 나바시리의 전체인구는 85,000명이다. 이 중 아까메의 숲이 있는 곳은 인구 50명의 취락지구인데, 이곳에 있는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에는 한국 청년도 많이 참가한 곳이다. 아까메의 숲에서는 에코리조트와 요양소의 두 가지 자원이 산촌휴양마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2-13. 아까메의 숲 산책로 간판

#### 가)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는 리조트와 내셔널 트러스트 지정지인 잠자리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자리 연못은 200ha이며, 400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다. 200ha를 자연공원화시킬 목표로 이곳이 조성되었으며,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10년전 골프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계기로 설립되었는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최초의 개발 불허 논쟁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리조트이지만, 잠자리 연못에 시행되는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및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에코리조트로 분류할 수 있다. 아까메 숲의 에코리조트에서 시행되는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은 울창한 아까메 숲 현장과 잠자리 관찰 연못시설 등의 현장에서 이루어 지지만, 현장 교육에 앞서 아까메 에코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및 생태교육 관련 이론은 숲속의 목조건축물인 생태강의실에서 이루어 진다(그림 2-14).



그림 2-14.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 생태강의실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 부근에 있는 잠자리 연못은 소나무와 편백이 밀생하며, 일본에서 제일 작은 잠자리가 서식하는 곳이다. 잠자리 연못의 일부 지역은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협회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 주인은 잠자리 연못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면서, 이에 대한 댓가로 약간의 비용을 산주에게 제공한다. 세계 청년 워크샵 개최시 움막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가 잠자리 연못과 아까메의 숲 에코리조트를 공간적 배경으로 개최되었다(그림 2-15, 2-16).



그림 2-15. 아까메의 숲 잠자리 연못 목조 관찰로



그림 2-16. 아까메의 숲 잠자리 연못 관찰시설

나) 아까메의 숲 요양소

1985년 대안병원이란 아이টে으로 출발한 요양소는 약, 검사, 입원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방법과는 달리 규칙적인 산촌체험생활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치료 방식을 채택하였다. 4월부터 11월까지만 이용되는데, 입원실의 80%가 가동되며 1개월 정도가 환자 교체주기이다. 병원건물은 매우 소박한 편으로, 환자들이 개별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이 있을 뿐 별다른 치료시설은 없다. 환자중 낮에는 직장에 출근하고 밤에만 요양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아까메의 숲 요양소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아까메의 숲 요양소 일반사항

구분	내 용
규모	부지 : 1500평, 환자 : 10명
시설	개별실이 있는 민가형 병원, 숲가마, 창고, 목욕탕, 방갈로 등
운영 프로그램	하루단위로 치료, 도예, 농사, 산책활동 중 2개 활동을 행함. 취식 할 채소를 직접 가꾸는 영농활동이 많이 이루어짐
이용 요금	이용료 : 4,5000엔 요금제도 : 생활보험대상자제도와 의료보험대상자제도 적용 실제 이용자 부담액수비율 : 30% 정도
이용계층	성인병, 만성질환, 자율신경계울장애 및 정신적 착란환자 (현재 유명해져서 병의 치료를 위해 전국에서 오고 있음)

2001년 현재 60살 정도된 성인병 전문의사가 운영하며, 인근 역과 오사카에 별도로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의사는 NPO(non-profit organism)의 일원은 아니지만, NPO 후원자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에 이런 시설이 1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시설 대부분이 모두 이익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보험대상자 제도와 의료보험대상자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러한 시설이 확산되는 정치적인 어려움과 행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건강을 목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촌휴양마을 사례로서 아까메의 숲 요양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림 2-17. 아까메의 숲 요양소 전경



그림 2-18. 아까메의 숲 요양소 내부 병실

## 2) 만남의 고향(ふれあいの郷)

일본 미에현 유자와정(町)에 위치한 유자와 만남의 고향은 주변 대부분이 산림이고, 휴양림이 이 지역에 8개 정도가 존재한다(그림 2-19). 일본을 대표하는 삼나무 풍경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식생은 삼나무와 활엽수 중심이며, 고도는 1000m이다. 눈이 많이 오면 3m까지 쌓이게 되며, 겨울에는 적어도 영하 5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유자와 정 만남의 고향이 속한 도시에는 수력발전소가 있어서 동경까지 전력을 공급한다.



그림 2-19. 유자와 만남의 고향 간판

### 가) 유자와 만남의 고향

유자와 만남의 고향은 도시민의 별장 등 전원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택지로 개발하여 임대하면서 동시에 숲관리 의무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자와 지역의 만남의 고향은 모집시기에 따라 3개로 구분된다. 1기는 1988년 2기는 1989년, 3기는 1991년에 개발되었다. 2기에서 3기로 이행하는데 2년이 걸린 것은, 그 시기에 일본의 버블경제 파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만남의 고향 1기와 2기는 완전히 계약되었으나, 3기 만남의 고향은 20구획정도가 계약되지 않았다.

각 구획은 1000m<sup>2</sup> - 2000m<sup>2</sup>까지 면적이 다양하며, 300만평에 1100만엔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가격은 시장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3년간 임대료를 우선 지불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후에 35년간 대부금액과 임목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도시의 입주희망자는 별장용지를 계약하기 전에 분수림을 계약하는데, 별장용지와 떨어진 별도의 지역에 입주희망자가 관리해야할 3구획의 국유림을 계약하게 된다. 1

구획당 토지보다는 1구획에 따른 입목축적량을 따르며, 기존의 분수림제도를 적용한다. 분수림제도는 국유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계약한 땅과는 별도의 국유림 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별도의 관리를 하게 되는 국유림 면적 및 입목축적은 자신이 대부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과 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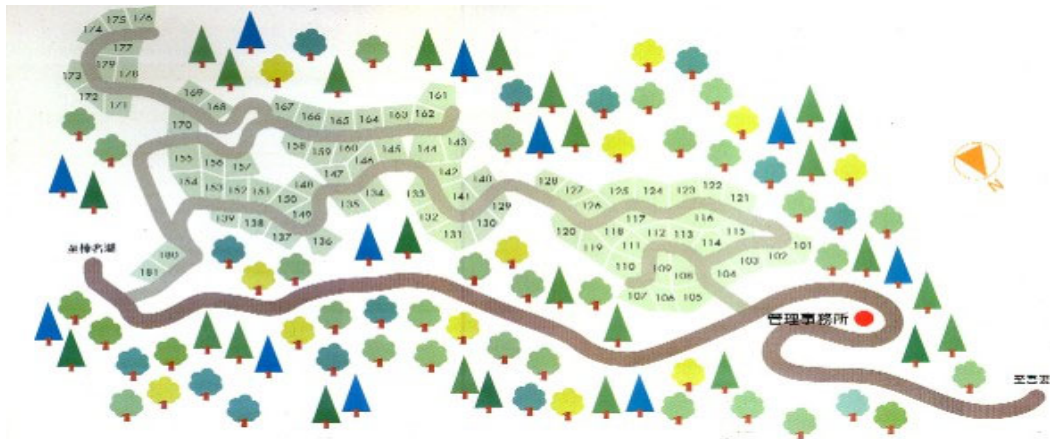


그림 2-20. 유자와 만남의 고향 배치도면



그림 2-21. 유자와 만남의 고향 진입로

임대연장은 35년 후에 가능하며, 국가가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는 민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한 번 대부한 별장은 매매가 가능하며, 상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친인척 관계나 직장에 의한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매매에 대해서는 권리이전에 따른 승낙비

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수도와 같은 시설 및 접근로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마을 내에서 별장지로 수도 및 길을 내는 것은 각 별장 소유자의 몫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입주하면 의무적으로 숲가꾸기 단체에 가입하게 되지만, 이는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내면서 자신의 몫을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신경은 거의 쓰지 않게 된다. 이제까지 계약을 파기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는 주로 개인의 경제적 문제에 의한 것이다. 또한 권리금 안에는 기반시설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 세금은 국유림이라는 특성상 국가로 직접 납부한다.

#### 나) 유자와 만남의 고향 주민 생활상

입주자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만남의 고향에 있는 집을 이용하는 기간에 대한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장 긴 사람이 반년 정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휴가철과 스키철(정월초하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입주자는 매년 8월 첫째 날 지역주민에 의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공무원이나 관리인은 프로그램 운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축제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유자와 만남의 고향 입주자 중 10% 정도는 법인이다. 개인 자격이 아니라 회사가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국인의 구입도 가능하다. 만남의 고향 개장 초기에는 회사의 임원이상이 주민 대부분을 구성하였는데, 이후 퇴직한 회사원도 많이 입주하고 있다. 매매 및 소유자의 자격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이를 통한 수입사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2001년 현재 유자와 만남의 고향에 입주한 주민의 구성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유자와 만남의 고향 주민 구성

구분	내 용
소유구분	전 체 : 164명 개인 명의 : 133명 법인 명의 : 31명
소유자 출신지역	수도권 지역 : 151명 니이가타현 : 7명 지역 주민 : 6명

유자와 만남의 고향에 입주한 주민들의 협의회가 있으며, 주민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등산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시설물 개발 요구에 대한 권리는 없으나,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주민의 편의를 배려하여 시설물을 임의로 개발해주는 정도이다.

입주한 주민들의 경우 자기가 관리하는 국유림 구역 내에서 벌채는 총 관리면적의 30%까지 가능하며, 입주한 주민들의 산채채취에는 규제가 없다. 입주한 주민이 자기의 관할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업기계를 빌려달라거나 사용법을 가르쳐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리동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입주한 주민들의 경우 집 설계는 본인이 직접하게 된다. 지하로는 제한이 없으나, 지상으로서는 2층까지만 올릴 수 있으며, 높이는 3m로 제한이 되어있다. 집이 차지할 수 있는 지상면적은 50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생각하면 최대 건평은 150평이 된다.

만남의 고향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설계가가 설계한 집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의 설계가가 설계한 집보다 내구성이나 편리성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동경 및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설계가가 설계한 집들은 겨울에 내리는 눈의 무거운 무게에 못 버티거나 수도관이 동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물 오염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하수처리는 금지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의 정화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장작을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나, 대부분의 난방은 보일러를 사용한다. 장작스토브, 보일러 그리고 석유난방을 활용하는 구조이며,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냉방은 지역의 특성상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림 2-22. 유자와 만남의 고향 내부 주택들

#### 다) 유자와 만남의 고향 관리사무소 역할

유자와 만남의 고향 관리사무소에는 현재 임업공제회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다. 임업공제회에서 만남의 고향 관리 입주자에 대해 위탁경영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입주자 한 명당 15만엔을 관리비로 책정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의 주요한 역할은 관내의 순찰, 가로등의 설치, 눈이 올 경우 제설작업 등의 일을 한다.



그림 2-23. 유자와 만남의 고향 내부 도로

마을 주민들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없으며, 입주자 협의회의 민원처리가 업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에게 숲과 숲가꾸기에 대한 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의 3기 유자와 만남의 고향은 아직 숲이 성숙되지 않아서 숲을 가꾸어주는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매년 식목일에 입주자에게 숲가꾸기 교육을 실시하는 행사를 관리동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오는 사람이 5명 이내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2-24. 유자와 만남의 고향 관리사무소

## 제3장

###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개발여건과 활용상의 문제점

#### 1.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현황과 개발여건

##### 가. 북부지역의 일반 개황

경북 북부지역은 일반적으로 경북관내 23개 시·군 중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등 11개 시군(4개 市, 7개 郡)을 일컫는다. 이 지역의 일반적 특징은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인구는 82만명(2003년말 현재)으로 경북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sup>3)</sup>이면서 소외지역<sup>4)</sup>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6%(전국 0.8%)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봉화, 영양, 예천 등 군지역의 인구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소득은 832만원으로서 전국(1,225만원)과 경북(1,397만원)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다.

북부지역에는 소백산, 월악산, 청량산을 위시한 국립공원 4개소와 도립공원 2개소, 대형댐 3개소(안동·임하·경천댐)와 낙동강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생태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양반의 고장답게 도산·소수서원, 안동하회마을 등 귀중한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북부지역은 대표적인 분지형 기후지대로 한서의 차 및 일교차가 크고 강우량이 많은 편이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양으로 농업여건이 양호하여, 벼, 사과, 포도, 감, 자두, 고추, 산채, 인삼, 약초, 송이, 참깨, 잡엽, 고랭지채소, 낙농 등의 농림업이 발달하였다.

경지면적은 경북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상주시, 의성군, 안동

3) 2004년 행정자치부의 ‘낙후지역 선정지표’ 선정결과,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하위 30%에 들어가는 지역이 경북 전체 11개이며, 이 중 북부지역의 8개 시·군(문경·상주·의성·예천·영덕·봉화·청송·영양 등)이 포함됨.

4) 북부지역은 경북지역 총 면적의 56.8%, 인구의 약 3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포항구미 양지역 합계가 50.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부지역은 19.6%를 차지하고 있음.

시 등의 순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논과 밭의 비중은 각각 54%와 46%로 논  
의 비중이 다소 높으나, 임야면적 비율이 높은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 영양군, 봉화  
군 등은 밭의 면적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3-1> 경북 북부지역의 경지면적(2003년)

(단위: ha, a)

구 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합계	논	밭
경상북도	291,751	156,777	134,974	171	97	74
북부지역전체	144,626	74,744	69,882	138	29	56
안동시	20,602	8,279	12,323	125	50	75
영주시	14,743	6,652	8,091	155	70	85
상주시	27,651	17,568	10,083	154	98	56
문경시	11,714	6,287	5,427	127	68	59
의성군	20,686	12,334	8,352	153	91	62
청송군	8,084	1,922	6,162	144	34	110
영양군	6,640	1,805	4,835	171	46	124
영덕군	6,612	3,531	3,081	112	60	52
예천군	18,704	11,975	6,729	177	113	64
봉화군	12,421	3,960	8,461	189	60	129
울진군	6,353	4,004	2,349	114	72	42

자료: 농림부, 「2003 경지면적통계」, 2004.

2003년 북부지역의 농가수는 104,757호로 경상북도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261,020명(경북의 46.6%)이며, 남녀 성비율은 각각 48%와 52%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표 3-2).

시군별로는 상주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의 순으로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많으며,  
이들 시·군은 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표 3-2> 경북 북부지역의 농가 및 농가인구(2003년)

(단위: 호, 명)

구 분	농가수	농 가 인 구		
		계	남자	여자
경상북도	216,851	559,684	269,721	289,963
북부지역 전체	104,757	261,020	125,863	135,158
안동시	16,449	41,900	20,778	21,122
영주시	9,508	26,189	12,857	13,332
상주시	18,004	45,965	21,654	24,312
문경시	9,188	23,093	11,258	11,835
의성군	13,548	31,424	15,340	16,084
청송군	5,588	13,702	6,523	7,179
영양군	3,889	9,579	4,542	5,037
영덕군	5,879	13,723	6,250	7,473
예천군	10,576	25,803	11,922	13,881
봉화군	6,566	16,212	7,987	8,225
울진군	5,562	13,430	6,752	6,678

주) 2000년은 농업총조사보고서 자료임.  
 자료: 통계청, 「2003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

북부지역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작물은 식량작물 대부분과 과채류 중 수박, 엽채류 중에서는 배추, 조미채소류 중에서는 고추, 마늘이 있으며, 과일 중에서는 사과와 배 등이 있다. 북부지역에서 50% 이상의 생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은 미곡, 잡곡, 두류, 서류 등으로 식량작물 생산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미곡의 경우 임야 비중이 높은 청송군과 영양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들의 생산면적 비중이 높다. 특히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지역의 생산비중이 높은 편이며, 두류의 경우 상주시 지역이, 서류의 경우는 안동시 지역의 생산비중이 높다. 과채류의 경우 수박을 제외하고 기후 및 재배조건에 따라 생산비중이 낮은 편이다. 수박의 경우 안동시, 봉화군, 영주시 등의 생산비중이 높은 편이다.

과실류 중에서 사과의 경우 영주시,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등이 주산지로서, 경북 전체의 약 90% 이상을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배는 상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포도는 상주에서, 복숭아는 영덕군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북부지역에 산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

는 관계로 약용작물 생산의 약 93%, 용재 생산의 약 60%, 버섯 생산의 약 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농림산물이 여타 지역에 비해 어떤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가를 특화계수(Location Quotient, LQ)<sup>5)</sup>로 살펴보았다. 특화계수를 보면, 식량작물의 경우 미곡, 잡곡, 두류, 서류 등이 북부지역에 특화되어 있으며, 과채류의 경우 수박과 오이 작물이, 엽채류의 경우 배추가, 조미채소류의 경우 고추, 생강 작물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실류 중에서 사과와 배는 생산비중은 높으나, 특화계수 상으로 특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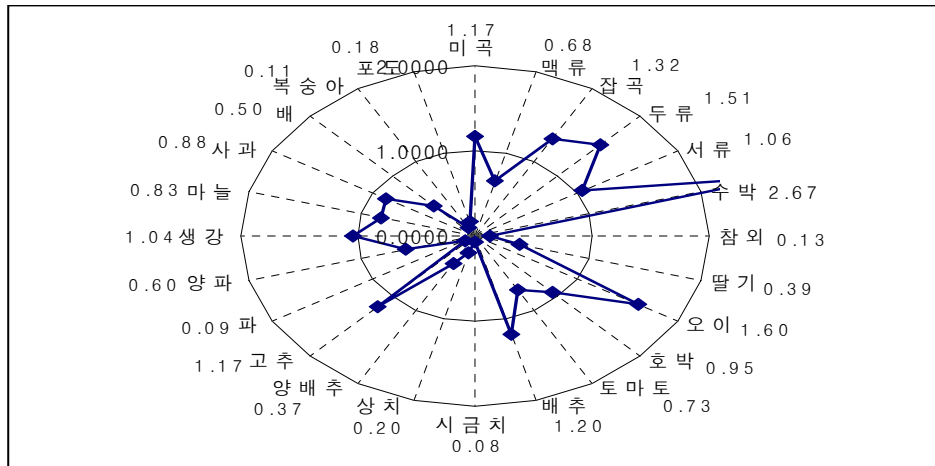


그림 3-1. 경북 북부지역의 농림산물 특화도

#### 나. 산림·임산자원 현황

##### 1) 소유형태별 산림면적

경북지역의 총 산림면적은 1,346천ha로 전국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형태별

5) 특화계수는 특정 지역의 작물생산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작물의 상대적인 특화정도를 나타낸다. 특화계수가 1보다 크면 특정지역의 해당작물이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text{특화계수(LQ)} = \frac{\text{북부지역 작물별 경지이용면적} \div \text{북부지역 총경지면적}}{\text{경북 작물별 경지이용면적} \div \text{경북 총경지면적}}$$

6) 사과의 경우 북부지역 내 영주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문경시 지역을 제외하고 타지역의 재배면적 비율이 낮아, 특화계수가 낮게 계산되고 있음.

로 사유림이 73.8%, 국유림 17.6%, 도·시·군유림이 7.6%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산악지대인 북부자원권과 동부연안권의 경우 사유림보다 국유림이나 공유림의 비율이 높으며, 도시지역일수록 사유림의 비율이 높다(표 3-3).

시군별로 보면 울진군(57.1%), 영양군(52.3), 봉화군(50.7)의 경우 국유림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고령군(95.7), 군위군(91.7), 경산시(91.6), 청도군(91.4), 칠곡군(90.7), 예천군(90.4)의 경우 사유림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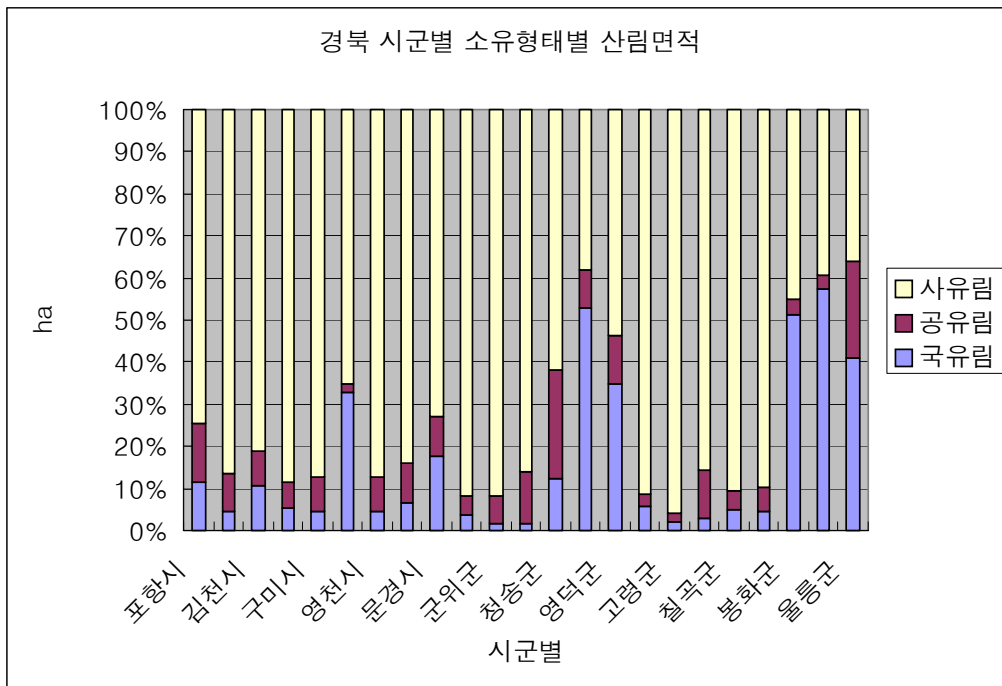


그림 3-2. 경북 시군별 소유형태별 산림면적

<표 3-3> 소유형태별 임야면적

(단위 : ha, %)

구 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비중	소 계	비중	도유림	비중	시군유림	비중	면적	비중
전 국	6,436,304	1,419,414	22.1	487,476	7.6	146,408	2.3	341,068	5.3	4,529,414	70.4
경 북	1,347,392	235,079	17.4	115,345	8.6	13,786	1.0	101,559	7.5	996,968	74.0
시 부	660,178	61,382	9.3	54,917	8.3	6,728	1.0	48,189	7.3	543,879	82.4
포항시	75,656	8,309	11.0	10,395	13.7	2,007	2.7	8,388	11.1	56,952	75.3
경주시	90,565	3,946	4.4	8,141	9.0	945	1.0	7,196	7.9	78,478	86.7
김천시	70,039	7,282	10.4	5,357	7.6	481	0.7	4,876	7.0	57,400	82.0
안동시	107,900	5,641	5.2	6,413	5.9	-	-	6,413	5.9	95,846	88.8
구미시	34,720	1,562	4.5	2,801	8.1	486	1.4	2,315	6.7	30,357	87.4
영주시	41,782	13,617	32.6	930	2.2	-	-	930	2.2	27,235	65.2
영천시	63,284	2,855	4.5	5,238	8.3	-	-	5,238	8.3	55,191	87.2
상주시	83,115	5,317	6.4	8,046	9.7	180	0.2	7,866	9.5	69,752	83.9
문경시	69,171	11,952	17.3	6,480	9.4	2,629	3.8	3,851	5.6	50,739	73.4
경산시	23,946	901	3.8	1,116	4.7	-	-	1,116	4.7	21,929	91.6
군 부	687,214	173,697	25.3	60,428	8.8	7,058	1.0	53,370	7.8	453,089	65.9
군위군	44,476	802	1.8	2,904	6.5	-	-	2,904	6.5	40,770	91.7
의성군	79,426	1,251	1.6	9,590	12.1	-	-	9,590	12.1	68,585	86.4
청송군	66,887	8,241	12.3	17,073	25.5	3,542	5.3	13,531	20.2	41,573	62.2
영양군	65,828	34,426	52.3	5,916	9.0	-	-	5,916	9.0	25,486	38.7
영덕군	59,693	20,691	34.7	6,954	11.6	-	-	6,954	11.6	32,048	53.7
청도6군	50,816	2,852	5.6	1,540	3.0	101	0.2	1,439	2.8	46,424	91.4
고령군	24,373	481	2.0	566	2.3	-	-	566	2.3	23,326	95.7
성주군	40,803	1,225	3.0	4,567	11.2	2,691	6.6	1,876	4.6	35,011	85.8
칠곡군	29,866	1,517	5.1	1,266	4.2	614	2.1	652	2.2	27,083	90.7
예천군	36,001	1,467	4.1	1,983	5.5	-	-	1,983	5.5	32,551	90.4
봉화군	98,246	49,777	50.7	3,746	3.8	100	0.1	3,646	3.7	44,723	45.5
울진군	84,609	48,345	57.1	2,949	3.5	10	0.0	2,939	3.5	33,315	39.4
울릉군	6,190	2,622	42.4	1,374	22.2	-	-	1,374	22.2	2,194	35.4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 2) 임상별 임목축적

경북지역의 임목축적량은 2001년 현재 총 88,610천m<sup>3</sup>으로서 전국 임목축적량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임상별 산림면적을 보면 침엽수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42.0%를 점하고 있고, 혼효림이 39.1%, 활엽수림이 18.1%, 기타 0.8%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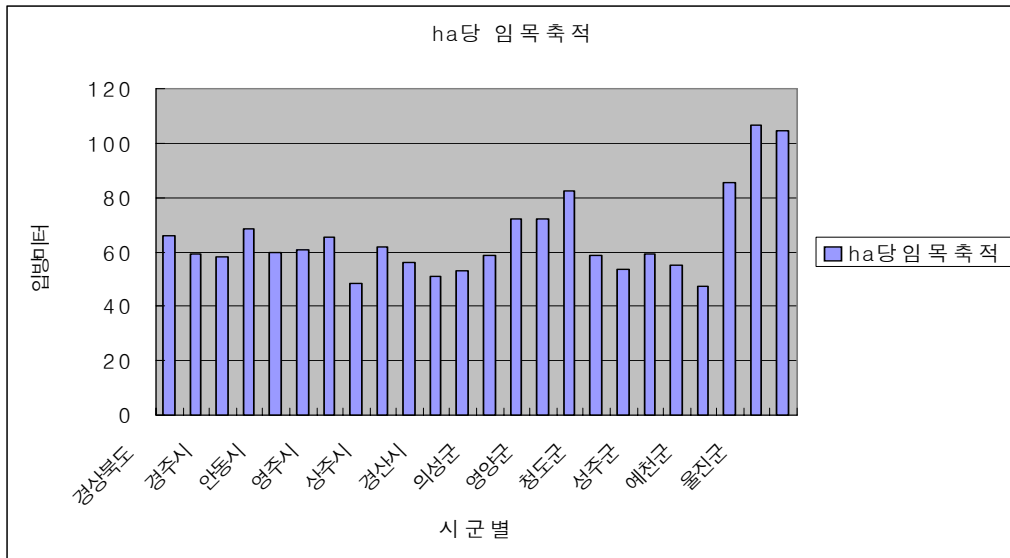
<표 3-4>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천m³)

구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축적	비율	축적	비율	축적	비율	축적	비율
전국	363,560	100.0	158,467	43.6	98,443	27.1	106,650	29.3
경북	78,506	100.0	33,530	42.7	15,289	19.5	29,687	37.8
시부	34,343	100.0	12,266	35.7	7,375	21.5	14,702	42.8
군부	44,163	100.0	21,264	48.1	7,914	17.9	14,985	33.9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및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한편 경북지역의 임목축적량을 시·군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부가 34,343천m³로서 9.5%, 군부가 44,163천m³로서 12.2%를 차지하고 있다. 숲의 울창함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축적은 경북이 평균 65.8m³/ha로 전국 평균(66.8m³)과 비슷한데 비해, 울진군의 경우 106.7m³/ha, 울릉군이 106.7m³/ha, 봉화군이 85.3m³/ha, 영덕군이 82.2m³/ha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3).



<그림 3-3> 시군별 ha당 임목축적

### 3) 임산물 생산

경북지역의 주요 임산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목재의 경우 침엽수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주시, 포항시 등 동부연안권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료

(장작, 목탄 등) 및 농용자재, 섬유원료(산닥나무껍질, 싸리나무껍질, 갈저 등)는 임목 축적량이 가장 많은 안동시, 봉화군, 예천군 등 북부자원권에서 주로 생산된다. 한편 밤, 호도, 잣, 대추 등의 임산부산물 종실은 경산시, 청도군 등 남부도시권에서, 그리고 약초, 산수유, 황벽나무껍질 등 약용 임산물은 봉화군, 의성군, 김천시, 문경시, 군위군 등 중서부내륙권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표3-5> 주요 임산물 생산 현황

구 분	목재 (㎡)	연 료 (M/T)	농용자재 (천M/T)	종 실 (천kg)	버 섯 (kg)	섬유원료 (kg)	수 지 (kg)	약 용 (kg)	산나물 (천kg)
전 국	849,319	170,344	4,098	143,511	4,526,572	266,765	2,434,165	1974862	23825
경 북	76,984	31,529	896	10,286	591,083	20,409	900	76,647	3,369
시 부	52,083	11,426	239	5,541	292,682	9,200	-	24,852	1,265
포항시	8,379	881	53	211	133,169	-	-	1,160	126
경주시	11,348	36	2	632	24,040	5,250	-	450	215
김천시	6,730	261	11	499	22,445	300	-	8,441	35
안동시	4,047	5,487	90	641	15,681	1,780	-	814	97
구미시	1,720	453	6	257	4,357	-	-	-	11
영주시	648	729	-	191	1,221	50	-	305	456
영천시	5,032	110	-	350	9,910	-	-	905	34
상주시	6,600	2,502	55	359	61,458	-	-	3,337	95
문경시	6,290	729	-	204	19,869	1,820	-	7,642	166
경산시	1,289	238	20	2,197	532	-	-	1,798	31
군 부	24,901	20,103	657	4,745	298,401	11,209	900	51,795	2,104
군위군	4,410	1,185	5	765	29,634	-	-	5,666	33
의성군	1,992	1,392	36	419	5,323	1,970	-	18,207	32
청송군	3,492	2,154	171	312	54,558	140	-	163	15
영양군	2,399	2,368	11	66	3,764	-	-	654	129
영덕군	371	1,702	37	222	42,434	600	-	169	33
청도군	1,248	1,187	116	1,323	49,450	180	-	445	45
고령군	384	1,186	15	779	2,089	-	-	50	2
성주군	679	542	22	192	2,255	-	-	427	65
칠곡군	191	12	8	160	3,353	-	-	170	19
예천군	1,707	820	69	171	22,703	5,955	-	3,992	72
봉화군	3,079	3,784	145	106	27,190	894	-	18,984	379
울진군	4,479	3,771	15	227	55,648	1,470	900	2,868	472
울릉군	470	-	7	3	-	-	-	-	808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및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다. 산촌의 현황

### 1) 산촌의 개념

산촌의 개념은 시대적 여건이나 학문의 영역, 정책의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하다. 시대적으로 식량과 땀감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화전민이 거주하는 촌락’이나 ‘나무·장작·숯 등을 생업으로 하는 촌락’ 등이 산촌으로 인식되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멀어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마을’ 또는 ‘사회적·경제적 조건불리지역’ 등으로 산촌이 인식되고 있다. 학문의 영역에 따라서 산촌은 ‘산지에 있는 마을’이라는 지리학적 개념, ‘임업이 발달하여 임업의존도가 높은 마을’이라는 임학적 개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산촌의 개념은 시대적 여건이나 학문적 영역이나 학자들의 관점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기 국가의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산촌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구분지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산촌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sup>7)</sup>.

우리 나라의 경우 산촌이란 “산으로 둘러싸인 산림 가운데 위치하는 촌락으로 임야 점유 비율이 높고(경지율이 낮음) 소득이 낮으며, 사회·경제·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생활환경의 정비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화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광의의 산촌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촌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의의 산촌 개념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산촌지역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읍면 단위 산촌지역에 대한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산촌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마을 단위 산촌에 대한 개념이다. 전자의 읍면 단위 산촌 지역은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6% 이하, 인구밀도 1.44인/ha이하인 읍면 지역<sup>9)</sup>”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후자의 산촌마을은 산촌지역 중에서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여건과 임업기반이 양호한 법정리(里)·동(洞) 지역을 의미한다.

7) 세계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산촌구분 지표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촌종합개발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C95-4, 1995, pp.24-26을 참조.

8) 산림청(2002), 「산촌종합개발교육교재」, p.38 참조.

9)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1999.10.21. 산림청 예규 제486호) 제2조(산촌의 정의)를 참조.

## 2) 산촌의 공간범위

전절에서 규정한 산촌의 개념과 구분지표를 사용하여 산림청(1996)에서는 읍면 단위 산촌지역을 구분하여 우리나라 산촌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산림청의 산촌지역 구분결과에 의하면, 산촌 지역은 1996년 전국 읍면의 34.8%인 498개 읍·면이다. 또한 전국 법정리의 30.1%인 5,116개 리, 전국 행정리의 29%에 해당하는 10,204개 리가 산촌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10)</sup>.

산촌지역으로 구분된 498개 읍·면이 전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 그리고 전체 임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표 3-6> 우리나라 산촌의 공간범위

단위: 천ha, 천명, 천호, %

구 분	면 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인 구	농가수
전 체(A)	9,940	6,456	2,033	44,606	1,501
전국 읍면	8,998	6,116	1,890	9,341	1,323
산촌지역(B)	4,618	3,746	548	1,940	381
비 율(B/A)	46.5	58.0	26.9	4.3	25.4

자료: 산림청(2002).

우리나라의 경우 읍·면 단위 산촌지역 중에서 2,034개 법정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즉, 전국 112개 시·군(36시 76군), 66읍 1,100개 면에 소재하고 있는 2,034개 법정리가 산촌개발사업 추진요령 제6조(산촌마을의 지정)에 의해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 3) 경북지역의 산촌마을

경북의 산촌마을은 10개시, 12개군에 소재하는 603개 법정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시부에 소재하는 산촌마을의 경우 김천시 6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주시에 45개, 문경시 44개, 영천시 40개, 경주시 38개, 포항시와 경산시에 각각 16개,

10). 산림청(1996). 「산촌지역 구분조사 계획보고」. pp.1-2 참조.

11). 산림청 산지계획과(1996). 「산촌종합개발 모델정립 방안」. pp2-3 참조.

안동시와 구미시에 각각 15개의 산촌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군부에 소재하는 산촌마을의 경우 영양군이 4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성군에 37개, 영덕군과 울진군에 각각 33개, 군위군 32개, 봉화군 31개, 고령군과 성주군에 각각 24개, 칠곡군에 7개, 예천군에 3개의 산촌마을이 지정되어 있다(부록 2 참조).

## 2.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활용실태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산림·임산·산촌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림·임산자원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임산자원의 조성·보전, 임업자원 활용 및 관리, 임업환경 개선 및 경영기반 구축, 소득원 개발 및 임산소득 증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가. 임산자원 조성·보전

- ‘조림사전예고제’ 확대 실시 : 산주 희망수종 양묘 생산·보급, 지역 특성에 맞는 묘목생산을 위한 양묘사업 확대, 조림용 묘목 보조지원제도 개선, 특용 활엽수종 우량종자 공급원 확대 지정사업 실시
- ‘생태적 조림사업 및 경관림 조성사업’ 확대 : 환경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 고급우량대경재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목재자급률 제고사업 추진, 국민의 야생조수 보호 인식제고 및 야생조수 애호단체의 지원 육성사업 실시, 임업진흥지구 지정·육성
- ‘숲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실시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임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실시, 지속적인 간벌 및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사업, 우량천연림 보육 확대 등 체계적 육림사업 실시
- ‘도시림 조성사업’ 전개 : 생태적 산림녹지체계로서의 도시림 조성·관리체계 확립, 도로노선·지역별 시범가로수길 조성사업, 관광지 및 도시주변 등에 우선조림사업 실시, 도시림 관리를 위한 유형별 도시림 조성·관리체계 구축
- 가정조림사업 실시 : 도시가구의 정원수 심기운동 전개 및 보급

<표 3-7> 도시림 관리주체별 업무내용

정 부 단 위	관 리 주 체	업 무 내 용
중 앙 정 부	산림청	도시림자원조사, 도시림관리단위 구분, 도시림 관리단위별 기본계획 수립, 관리단위별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 도시지역의 산지이용 기본계획, 도시림관리 예산 집행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산림·녹지과)	도시림자원조사, 도시림관리단위 구분, 도시림관리단위별 기본계획 수립, 관리단위별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 도시지역의 산지이용기본계획 수립
지역자치단체 (시 단위)	지역자치단체 (녹지조성과, 녹지보호과, 녹지관리과, 도시산림관리사업소)	녹화사업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 녹지시설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공원조성종합계획 및 시설 조성, 산림자원보호 및 관리,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관광위락 및 휴양시설개발 계획 및 조성

- 환경친화형 산불피해 복구시스템 구축 : 피해지역의 산림 및 환경에 맞는 대책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헬기·진화대를 연결하는 산림종합통신망의 구축
- 3도 접경지역 산불예방연계체제 구축 : 경상북도·강원도·충청북도의 공중진화대 및 지상진화대의 진화·안전장비 확충사업 실시, 산불예방·계도사업 강화
-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지속적 추진 :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하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강화, 병해충예찰 조사사업 실시, 생활주변 돌발성 해충의 집중방제사업 추진
-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의 지속적 실시 : 자투리 황폐지 완전복구사업 추진,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재해예방 및 산촌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 장묘제도의 보완 : 납골당 위주의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나. 임업자원 활용 및 관리

-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시설 조성사업 :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수련장, 국민의 숲 지정 등
- 산림문화공간 조성사업 :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체험공간으로서 포항시 내연산 수목원, 포리스트 랜드, 산림문화 창달과 안동유교문화권과 연계한 「산림과학박물관」, 「가야산 야생화생태식물원」, 경주, 영주, 문경, 군위, 청송, 울진 자연휴양림 내 야생화 단지 등 조성
- 보호수 지정·관리사업 : 우수한 산림자원 및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목의 지속적

인 보호관리, 보호수의 확대 지정·관리, 「경북의 보호수」 책자 발간, 병해충 예방, 수형과과·수목고사 예방을 위한 외과수술사업 실시

#### 다. 임업환경 개선 및 경영기반 구축

- 임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 기본임도망 재정비 및 전산화시스템에 의한 임도시설·관리·이용체계 정립
- 기본설계제도의 도입 :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시설사업, 기설 임도의 유지보수사업 강화
-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사업 : 사유림 경영시대의 핵심주체인 자영독립가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임업후계자에 대한 소유산림소재지 거주제한 폐지, 자격범위 확대, 영림계획 작성 및 산림사업 실행의 자율성 확대, 임목벌채·산림형질변경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임업관련 세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혜택 부여, 독립가 등 산림소유자의 전업형태 보장을 위한 복합임업경영 육성·지원사업
- 「시민참여형 복지산림제도」 도입 : 도시민이 조림에 출자, 성목이 되는 20년후 출자자의 노후복지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복지와 조림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
- 대리경영제 도입 : 방치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시스템 도입, 임업경영 활성화 및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소규모 사유림 경영협업체 육성사업 확대

#### 라. 소득원 개발 및 임산소득 증대

- 유형별 개발모델 정립 및 산림사업과 연계된 산림종합개발사업 : 소득원 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휴양림연계형 산촌마을에 자연휴양림 조성 지원, 산림소득형 산촌마을에 영림단·협업체 조직, 유통가공시설 및 단기소득원 사업 지원
- 산촌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 마을기반조성, 마을회관, 소하천정비 등, 생산기반 조성(임산물판매장, 공동저장고), 소득원 개발(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 소득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추진
- 산촌마을 소득증대사업 : 장기산림경영과 협업체별 단기소득사업의 병행추진, 임산물의 임협직매장 유통판매 지원사업 실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통한 산주(山主)의 소득증대사업, 임업수익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산지소득증대사업 모색

- 임산물 직매장 설치 및 저장시설 사업 : 임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는 유통망 조기구축 및 운영활성화 도모, 산지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책 모색
- 지역 「특화임산물」 개발 : 산림소득 전략품목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1시군 1특화임산물 지정, 우량명품의 브랜드화 등
- 지역 버섯생산 활성화 사업 : 포항시 등 17개 시·군 송이 주산지 대상으로 스프링쿨러 설치, 잡관목 제거, 비음도 조절 등의 송이환경개선사업 실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고버섯의 협업생산체제 구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 3.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활용상의 문제점

#### 가. 산림·임산자원 활용상의 문제점

첫째,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한 치산녹화사업으로 녹화는 되었으나, 대부분 30년생 미만의 유령림(幼齡林)이며, 숲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 생산력 증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낮은 임목축적량과 국내재 수익성 저하 등으로 목재자급률 하락 등을 타개할 수 있는 우량종자 공급원 확대와 지역산지 특성에 적합한 조림사업 추진, 간벌·천연림보육 등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육림사업 추진, 고급 우량대경재 생산단지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유림 경영 독립가, 임업후계자, 협업경영체 조직 등의 육성 부진으로 산림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산촌인구의 감소와 임금상승에 따른 임업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영세규모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유림 협업체 육성, 신지식인 양성 등 임업전문 인력육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산물의 경우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물류비용이 과다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요 임업경영상 자금회전의 장기화 및 수익창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및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임산물 직매장 설치와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시·군에 의한 비체계적이고 선심성 물량 위주의 임도노선 선정으로 과다한 산림훼손, 환경파괴 및 경관저해 요소가 많다. 또한 임산자 증가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산불·산림훼손 등 인위적 산림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가뭄기 건조한 기후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여 침엽수림이 많은 경북 북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훼손과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북지역의 70.7%에 달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휴양, 농축산업 등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 및 농업축산업과 연계한 산림산업화를 추진하고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린파트너제의 도입,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산림 조성을 통한 생태계의 복원과 레포츠기능 제공을 위한 임업의 복합산업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환경적 특성과 산림의 생태순환기능을 고려하여, 도시시설과 연계된 생태적 산림녹지체계로서의 도시림 조성, 시범가로수길 조성, 도시림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산촌개발의 문제점

오늘날의 산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생산·생활기반시설의 낙후 등 심각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산촌의 농가호당 소득은 평지농촌의 70~80%에 불과하다. 산촌은 경제사회적으로 최낙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최빈곤 지역에 속한다. 극심한 인구유출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기에 처해 있는 과소화 지역이다. 인구유출로 풍부한 산촌자원이 방치 또는 폐기되고 있으며 유희농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촌지역의 문제상황은 단순한 산촌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이며 산촌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또한 광대하다. 소중한 국토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산촌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미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아름다운 산촌을 가꾸어 나가려면 충분한 노동력이 있어야 하며, 산촌지역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갈 주체는 산촌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촌의 실상은 이러한 기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저소득과 저생산성, 낮은 생활수준으로 많은 산촌주민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산촌에 남아 있는 주민은 타지로 이출해야 생활유지가 어려운 농가들로서 자급식량생산을 위한 경사지농업에 매달려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산림노동 기회가 거의 없고 산림수입은 종실 등 원시적 부산물채취에

의존하고 있다. 산촌주변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산림농업(Agro-forestry), 산림자원과 관광·휴양을 연계한 산림 레크리에이션,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가공산업이나 첨단소재산업 등 산촌산업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산림소득의 저위, 농업소득의 저위, 농외소득 기회의 제약은 산촌농가 저소득의 원인이며 산촌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 산촌의 저소득은 또한 산촌인구 및 노동력의 유출을 가져오며 이는 다시 산촌자원의 방치와 폐기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즉 산촌의 식량생산기지화와 산림이용 규제→경사지농업→산촌산업의 부재→산촌농가소득의 저위→산촌인구 및 노동력 유출→노동력 부족과 자금부족→산림자원의 방치 및 포기→산촌농가의 저소득이라는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촌지역의 복합적인 문제상황을 극복하고, 경북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 사람이 어우러지는 활력 있는 생태산촌공간,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촌산업의 진흥, 생활기반의 정비, 전통문화와 인력의 양성,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의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산촌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촌에 우선 임업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기회를 살려야 한다. 풍부한 토지자원을 활용한 산림농업의 육성, 청정임산물의 이용과 가공, 산촌휴양·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산촌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산촌의 생활기반 정비를 들 수 있다. 산촌은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계와 조화되는 생활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주택의 건립이나, 도로의 건설, 상하수도의 설치, 조경시설 등이 자연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정비되어야 한다.

제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산촌에 대하여 교육, 의료, 정보, 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문화와 인력의 양성이다. 산촌 지역은 지리적, 지형적 특수성과 사회적 격리성으로 인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과 계승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산촌진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산촌마을의 이미지를 살리는 산촌조성이 요구되며, 산촌 생활양식의 복원을 통한 문화의 계승이 필요하다. 산촌의 지역자원 유지·관리 및 국토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역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촌지역의 사회경제적 격리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들의 자연체험과 산촌유학제도, 도시민의 산림관리 참여와 산촌생활의 체험, 산촌 생산물의 활용 기회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러한 산촌진흥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촌진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추진체계의 종합적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국가적인 산촌진흥의 청사진 즉, 산촌진흥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래 지향적인 산촌진흥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촌진흥 차원에서 추진되는 현행 산촌개발사업의 제도개선, 산촌진흥법의 제정, 산촌진흥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장

###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 비전과 활용 전략

#### 1.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SWOT분석

첫째, 경북 북부지역은 임야율이 75.2%인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서 백두대간을 축으로하는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태백산·소백산·가야산·주왕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림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산림자원을 산림휴양·관광 등 타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둘째, 21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이 영남내륙권의 중심지로서 강점을 살려 산림생태·휴양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유명림 단계인 산림자원을 보다 잘 가꾸고 지속적으로 경영·관리하여 미래지향적인 산림경관림을 창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경북 북부지역 임업이 안고 있는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인력의 부족 등 산림경영 여건의 취약성, 단기 임산소득 작목의 부족, 타부문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약점을 보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Strength</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남내륙권 중심지로서 수려한 산림경관</li> <li>·임야율 75.2%의 산촌지역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개발잠재력이 큼</li> <li>·침·혼유림의 임상이 발달되어 있고, 금강송, 춘양목 등의 목재, 송이, 약초 등 임산자원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li> <li>·산촌휴양·산촌마을 개발잠재력이 크고, 다양한 산림생태계 보유</li> </ul> </td> </tr> </table>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남내륙권 중심지로서 수려한 산림경관</li> <li>·임야율 75.2%의 산촌지역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개발잠재력이 큼</li> <li>·침·혼유림의 임상이 발달되어 있고, 금강송, 춘양목 등의 목재, 송이, 약초 등 임산자원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li> <li>·산촌휴양·산촌마을 개발잠재력이 크고, 다양한 산림생태계 보유</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Weakness</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직 산림자원을 가꾸고 키워야할 유명림 위주의 산림영급구조</li> <li>·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인력 부족 등 산림 경영여건의 미흡</li> <li>·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 등 타부문과의 연계성 부진</li> <li>·산림·임산자원 소득화에 대한 인식 및 행정적 지원 체계 미흡</li> </ul> </td> </tr> </table>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직 산림자원을 가꾸고 키워야할 유명림 위주의 산림영급구조</li> <li>·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인력 부족 등 산림 경영여건의 미흡</li> <li>·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 등 타부문과의 연계성 부진</li> <li>·산림·임산자원 소득화에 대한 인식 및 행정적 지원 체계 미흡</li> </ul>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남내륙권 중심지로서 수려한 산림경관</li> <li>·임야율 75.2%의 산촌지역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개발잠재력이 큼</li> <li>·침·혼유림의 임상이 발달되어 있고, 금강송, 춘양목 등의 목재, 송이, 약초 등 임산자원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li> <li>·산촌휴양·산촌마을 개발잠재력이 크고, 다양한 산림생태계 보유</li> </ul>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직 산림자원을 가꾸고 키워야할 유명림 위주의 산림영급구조</li> <li>·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인력 부족 등 산림 경영여건의 미흡</li> <li>·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 등 타부문과의 연계성 부진</li> <li>·산림·임산자원 소득화에 대한 인식 및 행정적 지원 체계 미흡</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Opportunity</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휴양·생태·환경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li> <li>·산림자원을 활용한 팩키지투어 관광 등 타부문과 연계 수요 증대</li> </ul> </td> </tr> </table>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휴양·생태·환경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li> <li>·산림자원을 활용한 팩키지투어 관광 등 타부문과 연계 수요 증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hreat</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노동력의 노령화·과소화와 경영인력 부족 등 산림경영여건의 악화</li> <li>·산림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환경임업에 대한 국제기준의 강화</li> </ul> </td> </tr> </table>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노동력의 노령화·과소화와 경영인력 부족 등 산림경영여건의 악화</li> <li>·산림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환경임업에 대한 국제기준의 강화</li> </ul>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휴양·생태·환경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li> <li>·산림자원을 활용한 팩키지투어 관광 등 타부문과 연계 수요 증대</li> </ul>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노동력의 노령화·과소화와 경영인력 부족 등 산림경영여건의 악화</li> <li>·산림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환경임업에 대한 국제기준의 강화</li> </ul>					

그림 4-1. 경북 북부지역 임업·산촌의 SWOT 분석

## 2. 북부지역의 산지·산림·임업의 비전과 발전방향

-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경북 북부지역 임업부문에 대한 수요는 과거의 조림·보호 단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산림휴양서비스·지역임업·첨단 산림산업·다목적 산지이용과 산촌수요 등으로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산림경영관리 수요 증대
  - 다양한 산림서비스 및 산림환경에 대한 도민의 수요 증대
  -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산림·지역임업에 대한 수요증대
  - 환경·생명·소재산업 등 첨단 산림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 휴양·생활·문화·주거공간으로서 산지이용과 산촌수요 증가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도민의 수요가 다양화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임업이 담당해야할 산지·산림·산림산업·산림서비스·산촌부문의 역할도 변화할 것임.
  - 산 지 :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보전·이용이 조화
  - 산 립 :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계의 조성·유지
  - 산림 산업 : 환경·생명·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림산업
  - 산림서비스 :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 산 촌 : 첨단 산림산업·쾌적한 정주공간·녹색 환경자원 창출 공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산지·산림·산림산업·산림서비스·산촌이 담당해야할 역할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선진 임정의 실현”이라는 임업비전 설정이 필요함.
  - 경북 북부지역 임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관리하고 둘째,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으로 육성하며 셋째,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할 것임.

###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 임정의 실현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으로 육성
-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촌·산림서비스 제공

그림 4-2.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산촌의 비전

### 3.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전략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이 지향해 나가야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 임정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전략(표 4-1 참조).

①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공원의 조성

- 내륙영남권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가진 경북 북부지역 임업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도록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개념에 의한 산림생태공원 조성

② 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산림생태계의 보고이며 녹색 청정지역으로서 경북 북부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생태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유지·보호·관리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의 육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도·임업기계 등의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형 첨단 산림산업을 육성

④ 도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산림 휴양·관광·여가 공간의 제공 등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⑤ 합리적 산지이용 및 쾌적한 산촌 정주공간 조성

- 경북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북부지역의 합리적 산지이용과 도민의 생활·여가·문화 공간으로서 쾌적한 산촌 정주공간 조성

⑥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정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임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정비

<표 4-1>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산촌의 활성화 방안

발전전략	주요 정책과제
①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li> <li>◦백두대간 내륙관광벨트 주변 생태계보전 및 경관림 조성</li> <li>◦안동댐 및 임하댐 수변 풍치·경관림 조성</li> <li>◦산림박물관·수목원을 경북 북부지역 산림메카로 활용</li> <li>◦경북 북부지역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li> <li>◦경북 북부지역 태백산맥·소백산맥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li> </ul>
② 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유지·보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li> <li>◦생태적으로 건전한 보속생산형 산림생산구조 정비</li> <li>◦산림생물유전자원보전과 우량종묘 공급기반 조성</li> <li>◦과학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li> </ul>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li> <li>◦국·공유림의 효율적 관리·경영기반 구축</li> <li>◦사유림의 경영기반 조성과 협업경영의 활성화</li> <li>◦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임산물 소득증대</li> <li>◦산림농업(Agro-forestry) 육성과 주민의 소득증대</li> <li>◦21세기형 첨단 생명·환경·산림산업 육성</li> </ul>
④ 도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의 공익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강화</li> <li>◦도시림 관리 계획제도 도입과 지원체계 정비</li> <li>◦경북 북부지역 산림휴양망 구축과 휴양시설 확충</li> </ul>
⑤ 합리적 산지이용 및 쾌적한 산촌 정주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 산지이용 체계 정립</li> <li>◦휴양·생활·문화공간으로서 산촌역할 정립</li> <li>◦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생태 산촌마을의 조성</li> <li>◦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 산촌마을의 연차적 조성</li> </ul>
⑥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정비전 설정과 지역산림계획의 수립</li> <li>◦경북 북부지역 임정의 기능강화 및 행정조직 체계 정비</li> </ul>

## 제5장 연구의 개요

###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1.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공원 조성

- 내륙영남권의 중심지로서 수려한 산림휴양·관광·문화자원과 다양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경북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도록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광역 산림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년차적으로 패키지 사업을 추진

#### 가.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조성 계획의 수립

- 경북 북부지역 광역 산림생태공원 조성권역의 지정
  - 상주-문경-예천-영주-봉화-소백산으로 연결되는 경북 북부지역 백두대간 벨트와 안동 청량산-울진 통고산·백암산-청송 주왕산-안동 임하호·안동호로 연결되는 영남 내륙권 순환관광벨트 주변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광역 산림생태공원 조성권역으로 지정
- CIP개념에 의한 경북 북부지역 광역 산림생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 경북 북부지역 백두대간벨트와 영남내륙권 순환관광벨트 주변 생태계 보전 및 경관림 조성, 임하호 및 안동호 수변 풍치·경관림 조성, 경북북부 산림박물관·수목원 조성, 경북북부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 경북북부 자연휴양림·산림전시관 조성, 경북북부 태백산맥·소백산맥 등산로 조성 등을 연계한 CIP개념의 경북 북부지역 산림생태계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년차적으로 패키지 사업을 추진

#### 나. 백두대간 내륙관광벨트 주변 생태계보전 및 경관림 조성

- 경북 북부지역 백두대간 축의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 김천시 추풍령에서 봉화군 소백산까지 상주-문경-예천-영주-봉화로 연결되어 있는 경북 북부지역 백두대간은 4개시군 24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한 산림생태자원이 분포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마루금 좌우 생태축의 산림자원을 보존관리
- 영남내륙권 순환관광도로 가로수·꽃길 조성
  - 안동 청량산-울진 통고산·백암산-청송 주왕산-안동 임하호·안동호로 연결되는 영남내륙권 순환관광벨트 주변 도로를 따라 은행나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전나무, 산딸나무, 살구나무 등 향토특색에 맞는 가로수·꽃길을 조성
- 영남내륙권 순환관광벨트 주변 풍치·경관림 조성
  - 내륙영남권 순환관광벨트 주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계절별로 변화있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산벚나무, 복자기, 느티나무, 전나무 등의 풍치·경관림 조성

#### 다. 임하호 및 안동호 수변 풍치·경관림 조성

- 임하호 및 안동호 수변 풍치·경관림 조성
  - 안동시 일대 임하호 및 안동호 수변관광자원과 산림자원을 연계개발하기 위하여 계곡 주변의 가시권에 홍단풍, 산벚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의 풍치·경관림을 조성
  - 임하호·안동호의 유람선 관광객을 위한 수변관광자원을 위해 유람선이 운행하는 계곡 주변의 가시권에 풍치·경관림을 조성

#### 라. 산림박물관·수목원을 경북 북부지역 산림메카로 활용

- 기조성된 산림박물관·산림수목원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여 산림환경연구소내 산림박물관·수목원을 경북 북부지역 산림메카로 육성
- 경북 산림박물관·수목원을 활용하여 영남내륙권의 산림문화·역사·유적 등 산림사료를 보전·전시하고, 산림의 가치를 체험·교류·교육하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 야생동물생태공원, 곤충생태원, 수생식물원, 실개천생태원 등의 조성을 통해 경북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박물관·수목원 중심의 산림의 교육·연구·체험학습의 복합적인 경북 북부지역 산림메카로 육성

마. 경북북부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

- 21C에는 친환경적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도권으로부터 경북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수려한 산림자원을 내포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오지권 산촌마을은 쾌적한 산림휴양·관광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 수도권과 가깝고 수려한 자연경관·청정성·풍부한 임산자원을 갖고 있는 영주(부석·순흥 등), 문경(문경읍·가은읍 등), 봉화(춘양·물야 등) 일대 국·도유림이 감싸고 있는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 소백산 국립공원 및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산촌 문화마을권을 벨트화하고 산지·산림·산촌을 아우르는 산촌마을종합개발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바. 경북 북부지역 태백산맥·소백산맥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 경북 북부지역 태백·소백산맥 백두대간 등산로 개발·홍보
  - 보은의 구병산에서 속리산에 걸친 43.9km의 “충북 알프스” 등산로를 연장하여 문경새재에서 소백산에 이르는 경북 북부지역 태백·소백산맥 등산로를 개발하여 등산코스로서 홍보하고 산림휴양 관광객을 적극 유치
- 경북 북부지역 태백·소백산맥 백두대간 등산로와 연계한 산촌진흥
  - 문경새재에서 소백산에 이르는 경북 북부지역 태백·소백산맥 백두대간 등산로 주변의 황토를 이용한 황토욕, 등산객의 민박유치, 산채·버섯 등 지역특산 임산물의 판매, 부석사·희방사·소수서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팩키지 투어 개발 등의 산림휴양·관광 상품화를 통하여 산촌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2. 생태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유지·보호·관리

가. 생태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미래 경북 북부지역의 울창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경북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림사전 예고제”, “생태적 조림사업 및 경관림 조성사업”, “도시림 조성사업”,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등의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IMF이후 정부실업 대책차원에서 임업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과 연계추진하여 산림가꾸기에 대한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하고 고용을 창출
- 경북북부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림수종을 선택하여 용재생산림, 생활환경림, 수원함양림, 천연보육림, 인공갱신림 등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

#### 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보속생산형 산림생산구조 정비

- 녹화된 산림자원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있는 보속생산형 산림구조로 유도하기 위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숲아베기 등의 육림사업을 확대하여 경북 북부지역 산림의 영급을 상향으로 이동
  - 산림의 생육단계별, 경영목적별로 적절한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건전한 임상과 우량용재 생산을 위한 보속생산형 영급구조로 전환을 유도
- 경북 산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종개발, 생태적으로 건전한 보육방법 확산, 그리고 보속생산을 위한 기술적 산림관리와 육림사업을 확대
- 경북 북부지역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천연림지역, 임하호·안동호 주변 수원함양림 주변, 주왕산 국립공원·청량산도립공원 등 공익적인 기능이 큰 산림지역에 대한 보호지역지정 확대 및 지속가능한 보속생산형 산림 관리의 강화

#### 다. 산림생물 유전자원 보전과 우량종묘 공급기반 조성

- 산림생물 유전자원 보전과 식물종자은행 운영
  - 21세기 예견되는 유전자원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경북 향토산림 식물종자를 저장·보관하기 위한 수목원·식물원과 첨단 종자저장고, 발아기 시설 등을 구비한 식물종자은행의 운영
- 우량종묘 공급을 위한 산림용 종자·묘목 공급기반 조성

- 우량종묘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수목원·식물원 중심의 산림용 종자 생산·공급체계를 정비하고 우량종묘 인증제도를 강화

#### 라. 산림자원의 유지·보호·관리를 위한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 산불발생 단계별로 산불위험경보제와 조기발견·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종합무선통신망, 산불진화 장비를 현대화하고, 산불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산불피해 보상제도를 마련
  -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경북지역의 산불진화를 위한 전용 헬기를 확보하고 대형산불 피해지의 환경친화형 복구시스템 구축과 생태계 변화의 추적관리가 요망
-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지역별 산림병해충 종합방제체계 확립
  - 울진의 소광리 숲, 봉화의 춘양목 등 경북 북부지역의 우량소나무림에 대한 산림생태계 보존과 송이 등 임산물 주산지를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예보제를 실시하고 산림생태계 회복지역은 생물적방제와 자연천이를 유도
  -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중심의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를 강화하고, 병해충 발생시 조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검역기능을 강화
- 산사태 등에 의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방지, 취수원 등 다목적 사방댐 시설과 마을환경 사방사업을 확대하고 산사태발생 예측기법 개발과 위험지역을 집중관리

###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 육성

####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가치있는 울창한 숲 조성을 위하여 지구촌 차원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국토보전림, 생태보전림, 보건휴양림, 수원함양림, 용재생산림 등 산림기능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현장단위에서 이행 강구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도, 기계화, 임업노동력 등 경

북 북부지역의 산림경영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임도시설과 관리는 산림피해방지·경관유지에 중점을 두어 환경친화적으로 실행하고 종전의 예산단비 개념에서 실행단비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사업비를 반영
- 임업생산성 증진을 위해 산림조합 기능인작업단 중심으로 임업기계·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경북북부 지역별 임업노동력 확보와 임업기계·장비 기술교육훈련을 강화

#### 나. 국·공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기반 구축

- 울진, 봉화, 영양, 영덕, 영주 등 국유림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관리하는 남부산림관리청 및 산림관리소와 협조체계 구축
- 청송, 의성, 영덕, 상주, 문경, 영양 등으로 분산분포되어 있는 공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해 산림환경연구소내 공유림 경영관리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운영
- 대부분수 공유림의 대부분수 심사, 관리, 경영, 사후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와 산림경영 시범림으로서의 공유림 기능 제고
- 공유림의 경영에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고 경북 북부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산림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린오너(Green-Owner)제 도입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유림 서비스 제공

#### 다. 사유림의 경영기반 조성 및 협업경영의 활성화

- 경북지역 산림면적의 약 74%를 점하고 있는 사유림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유림 경영주체, 산림조합, 산림단체, 산림작업단의 체계적 육성
  - 자립경영이 가능한 독립가, 임업후계자는 지역임업을 선도하는 주체로 육성하고 자립경영이 어려운 영세산주, 부채산주를 위해 협업경영체, 대리경영체를 육성
  -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고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전문 산림단체로 육성하고, 품목별 전문조합, 산림작업단 등 다양한 산림단체의 육성
- 경북 북부지역의 상주, 울진, 안동, 영덕, 봉화, 문경, 영양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33개 협업체(약 3,311명의 산주, 25,249ha의 산림면적)의 공동소득원 및 산림

경영사업을 내실화하여 협업체의 양적확대보다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

- 소규모 산림의 협업화로 500ha이상의 경영단위로 규모화하고 협업경영단지별로 전문경영인을 배치하여 경영성과 평가제도를 도입, 성과에 따른 정부지원 차등화
- 협업체에 대한 산림경영·작업기계·전산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영세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

#### 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임산물 소득증대

- 울진, 봉화, 청송, 영덕 등에서 채취되는 자연산 송이버섯, 의성, 봉화, 문경, 상주 등에서 재배되는 약초, 산수유, 황벽나무껍질 등의 약용임산물 등 특화작목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 경북 북부지역 임산물 저장·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출하시기 조절·상품가치 보전으로 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소득증대
-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금강송, 춘양목 등 국산재를 활용하여 건축재, 가구재, 산업용재, 제재목 등을 조달하는 목재가공산업을 적극 육성
- 국산소재재를 이용하는 제재소, 목조주택, 목공예 등의 목재산업을 육성
- 금강송, 춘양목 소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목공예 제품 개발
- 금강송, 춘양목 소나무 원목의 경우, 고급가구재나 건축내장재, 예술 조각작품 제작 등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급 목공예 제품으로 개발
- 금강송, 춘양목 소나무 숲 가꾸기사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간벌재의 경우, 목각, 목침, 목기, 소형 목제 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의 중저가 목공예 제품으로 가공
- 금강송, 춘양목 소나무 폐잔재나 관솔, 톱밥 등의 경우, 차량이나 실내에서 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향기주머니, 열쇠고리 등 저가의 소품 개발
- 금강송, 춘양목으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목공예 제품을 전시관에 전시하고, 수요자가 원할 경우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장 설치
- 도시의 학생이나 단체가 목공예 체험을 원할 경우, 울진·봉화 관내에 거주하는 목공예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공예 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함.
- 임산물직매장을 통한 주산지과 소비지 직거래체계를 확립하고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로 생산자·소비자 보호



그림5-1. 금강송·춘양목 소나무 공방

- 생산자 전문단체에 저장·포장 시설 및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단계를 6~7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 금강송, 춘양목 소나무 숲 가꾸기사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간벌재 및 주벌시 발생하는 원목을 수집하여 목공예 재료나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벌목 집하장을 설치
- 집하장 시설 주위에 원목을 제재로 가공할 수 있는 제재소와 간벌 소경재를 톱밥으로 가공할 수 있는 톱밥가공공장 등을 배치

#### 마. 농림복합 산림농업(Agro-forestry) 육성과 주민 소득증대

- 산림자원을 농축산업의 원자재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산림산업을 물질대사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
- 산림산업에서 생산되는 소경재·폐목재 등을 환경 농·축산업의 원자재로 활용하는 등 농림축산업을 혼합경영하여 경제성 제고
- 환경농업용 유기질 비료, 사료용 톱밥 등과 연계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목초·목탄, 톱밥제조를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산주들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보급
- 산림농업(Agro-forestry)의 실용화를 위한 각종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경북 북부지역 농림가에 보급하고 산림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정책적 지원장구

- 용재생산의 장기 소득회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장뇌삼, 약초 등의 단기 임산약용작물, 야생화, 분재, 조경수, 단기 특용임산물, 느티나무·산초·헛개나무 등 기능성수목, 흑염소 등의 임간방목 등을 결합한 산림복합경영 모델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 산촌에 방치되어 있는 간벌재 및 임지내 폐잔재를 이용하여 축산분뇨 정화용 톱밥을 생산하거나 우드칩, 목탄·목초액 등의 유기농업용 원료로 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그림 5-2. 경북 북부지역 산림농업(Agro-forestry)의 개념도



그림5-3 경북 북부지역 삼림농업(Agro-Forestry) 육성의 예

바. 21세기형 첨단 생명·환경·산림산업 육성

- 경북 북부지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경북북부의 특성에 맞는 첨단 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
  - 첨단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금강송·춘양목소나무의 우량유전형질 추출과 보전, 내충성 품종, 내공해성 정화수종 등의 환경친화적 신품종 개발
  - 생물공학 기법과 추출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의약품과 식료품, 향기 등 천연물질의 공급원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개발과 산업화
  - 산림자원에서 추출한 목탄·목초액을 활용하여 무공해 농약, 환경친화적 농림업원료 등으로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
- 경북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산림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산림환경연구소, 임업기술직 공무원과 산림단체,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민의 클러스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강화

4.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강화

- 임하호, 안동호 주변 산림의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강화
  -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대를 위한 기술적 산림시업 및 관리와 수원함양기능 산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구축
- 산림의 탄소흡수·저장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탄소흡수 기능이 좋은 산림수종을 개발하고 탄소흡수 기능 확대를 위한 간벌과 활엽수림 보육작업을 확대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경북 북부지역 관내 탄소배출 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의 산림조성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적극 유도
- 경북 북부지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자생동식물자원, 야생조수 등 유형·무형의 산림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산림관리 강화
  - 경북 북부지역 산림의 공익기능이 지닌 가치의 평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

#### 나. 도시림 관리계획제도의 도입과 지원체계 정비

- 도시림 관리를 위한 계획제도 도입과 지원체계 정비
  - 경북 북부지역의 도시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림 유형별로 조성·관리 방향 제시하고 도시림관리 계획제도 도입과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 가로수, 수목원, 도시공원 등 도심과 외곽지역을 잇는 도시림을 확충하고 산림사업과 연계한 도시경관림·환경정화수 조림 확대
  - 도시환경림·보건휴양림·교육문화림·임업생산림 등 도시림 유형과 규모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로수, 공원 등 유형별 도시림 조성·관리기술 정립
- 도시에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녹지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림 기능구분과 총량기준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도시경관과 생태적기능을 고려한 「도시숲·녹지」의 조성하고 도시민의 건강관리와 자연체험을 위한 삼림욕장 등을 확충
  - 가로수, 녹지대, 공원 등 도시림확충과 생태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인구, 산림규모 등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기준 마련

#### 다. 경북 북부지역 산림휴양망 구축과 산림휴양시설 확충

- 경북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봉화 청옥산, 울진 통고산, 영덕 칠보산, 영양 검마산 등 4개 국유자연휴양림과 문경 불정, 청송 청송, 울진 구수곡, 상주 성주봉, 영주 옥녀봉, 안동 계명산 등 6개 지자체자연휴양림, 그리고 예천의 학가산우래개인자연휴양림 등 지역별 산림휴양망 구축과 산림휴양시설 확충
  - 휴양권별 휴양수요·자원분포와 기존 휴양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산림휴양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경북 북부지역 방문객이 편리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서비스 정보망 구축
- 산림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경북 북부지역 주민 및 방문객의 산림휴양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참여를 유도
  - 경북 북부지역 산림문화재 발굴 복원과 산림문화 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학계, 민간단체 등이 공동주최하는 산림문화축제 주간을 설정

## 5. 합리적인 산지이용 및 쾌적한 산촌조성

### 가. 북부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이용체계 정립

-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생태적 산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적인 산지개발제도 도입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차등화 등 생태적 산지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산림·임산자원을 활용한 산림농업 등의 소득사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규제완화 및 산지전용기준 정립
  - 보전·준보전임지의 전용제도를 통합하여 산지전용 허가로 일원화
- 합리적 산지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에 따른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지관리체계 정비
  - 산지의 종합적·체계적 이용을 위하여 현재 이용목적별로 생산·공익·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지관리체계를 권역특성을 감안한 산지관리체계로 정비

### 나. 휴양·생활·문화공간으로서 산촌역할 정립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보전의 파수꾼으로서 산촌의 역할을 정립
  - 산림환경·생태계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산림휴양·자연학습 공간의 제공, 국토자원 관리 측면에서 산촌의 역할과 가치 정립
- 울진 원당마을, 봉화 두내마을, 영주 주치골마을, 예천 우래마을, 영양 사곡마을, 문경 석항마을, 상주 남곡리마을, 안동 고란리, 의성 금봉마을 등 경북 북부지역의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9개 산촌마을을 인간과 산림이 공생하는 정주공간으로 유도
  -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있는 산촌으로 가꾸고 산촌을 복합산업(1·2·3차) 기지로 육성하여 주민소득 증대 도모

### 다.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생태 산촌마을의 조성

- 새로운 생태산촌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미래형 전원주거수요 증가에 대응한 생태적 산림도시 개발 등 경북 북부지역 주

- 민의 새로운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산촌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 21세기형 생태산촌 마을의 조성을 위한 모델개발 및 보급
  - 환경친화적인 생태산촌 가꾸기 모델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연구·법체계 정비 및 관련 이해당자자간의 횡적·종적 연계체계 확립
- 직접지불제 도입 등으로 새로운 생태산촌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6. 21세기 경북북부 임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정비

### 가. 21세기 경북북부 임정비전 설정과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산림·임산자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 북부지역 임정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천년에 경북 북부지역 임정이 나가야할 임정비전의 설정이 우선적 과제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임정비전 설정작업은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여건과 현황 분석,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경북 북부지역 주민과 공무원, 학계 및 전문가, 임업 단체 및 산주들의 총체적 의견수렴과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북 북부지역 종합산림계획의 수립
  - 경북북부 지역산림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지역산림계획(1998~2007)”은 산림자원의 조성, 보호,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추진전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북북부 시군단위의 산림수요를 반영한 밑으로 부터의 계획이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21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임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상향식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나. 경북 북부지역 임정의 기능강화 및 행정조직 체계의 정비

-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임정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행정조직의 기능강화
  - 경북 북부지역의 산림·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 임정의 실현”이라는 21세기 임업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요망됨.

- 경쟁력 있는 임업과 첨단 산림산업의 조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주,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조합, 산림단체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가 요망됨.
- IMF이후 경북 북부지역의 시·군단위 산림행정조직 및 전문기술인력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선진임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산림 행정조직의 기능강화와 사기양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경상북도. 각년도. 「경북통계연보」.
- 경상북도·봉화군. 2005. 「지속가능한 춘양목 육성 장기기본 계획의 수립과 춘양목 특성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 경상북도·울진군. 2005. 「금강소나무림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귀곤. 1993. 「생태도시계획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3. “도시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 에코폴리스.” 「환경과 조경」. 57:141-149.
- 남부지방산림관리청. 1996. 「경북북부지역 산림경제권 발전계획(1997~2006)」.
- 농림부. 2004. 「2003 경지면적 통계」.
- 대구경북연구원. 2006. 「경북북부 APC활성화 방안」.
- \_\_\_\_\_. 2006. 「경북 북부지역 농업발전 방향의 모색」.
- 박명규외. 1993. 「우리의 산촌」. 일신사.
- 산림청. 각년도. 「임업통계연보」.
- 산림청. 1996. 「산촌지역 구분조사 계획보고」.
- \_\_\_\_\_. 1999. 「산촌개발 평가보고서」.
- \_\_\_\_\_. 1999.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 \_\_\_\_\_. 2001. 「자연친화형 산촌휴양마을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 \_\_\_\_\_. 2002. 「산촌종합개발교육교재」.
- \_\_\_\_\_. 2002.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산림휴양종합대책 수립」.
- 산림청 산지계획과. 1996. 「산촌종합개발 모델 정립방안」.
- 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01. 「생태공동체적 산촌조성을 위한 워크샵」.
- \_\_\_\_\_. 2002. 「국제산촌진흥포럼」.
- 임업연구원. 1997. 「우리나라의 산촌지역 구분조사」.
- 장우환. 1997. “한국 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장우환. 2000. “산촌진흥의 현황과 비전.” 「생태산촌마을 만들기 모임 창립총회 발표논문」.
- 장우환·손철호. 2001. “새로운 산촌개발: 산림도시.” 「농촌경제」. 24(1):141-161.

- 전국귀농운동본부. 1997. 「생태마을만들기, 그 현황과 과제」.
- 통계청. 2004. 「2003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산촌개발 모형과 개발계획」.
- \_\_\_\_\_. 1995. 「산촌종합개발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_\_\_\_\_. 1999.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 \_\_\_\_\_. 2000.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_\_\_\_\_. 2000. 「산림도시 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
- \_\_\_\_\_. 2000.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 \_\_\_\_\_. 2002.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 堀 靖人. 2000. 「山村の保續と森林・林業」. 九州大學出版會.
- 飯田繁(2002). “森林・山村と教育をめぐる新しい動き.” 「山村社會の持續的發展に關する  
日韓學術심포지엄」.
- 熊崎實. 2000. “木質Bio-mass發電: 歐美諸國の動向と日本での展望.”
- 總合研究開發機構. 2000. 「循環型社會の先進空間」. 農文協.

부록 1. 산촌종합개발 관련 법규

<산림사업 관련 법규>

법규	구분
산림법	·산림의 이용구분(제16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제16조의 4)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조성등(제31조) ·분수림의 설정(제88조)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제100조의 3)
산림법 시행령	·산림의 보전·이용 방향(제22조의 2) ·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제22조의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제5조) ·소유구조개선(제6조) ·경영구조개선(제7조) ·유통구조개선(제8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제9조) ·산림의 이용·지원(제12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제15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제17조)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의 구분(제3조) ·사방지의 지정(제4조)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제4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제29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제67조) ·한계농지 등 정비의 종류(제77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제4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빈집의 정비(제1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제4조) ·도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도로법	·도로의 점용(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제41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제50조)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제30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등(제35조)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제36조) ·농지의 전용신고(제37조)

법규	구분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제14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제15조) ·농외소득원의 개발(제20조) ·농외소득증대 계획의 수립(제21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제29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 가공 산업의 육성 등(제5조)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 등(제6조)
국도이용관리법	·국도이용계획의 내용(제6조)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제13조의 3)
오지개발촉진법	·개발지구의 지정(제4조) ·개발 계획의 수립(제7조)
하천법	·하천의 점용 허가 등(제33조)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의 점용 등(제14조)
건축법	·건축의 허가(제8조) ·건축의 신고(제9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방류수 수질기준(제5조)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제9조) ·단독정화조의 설치(제10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의 면제(령제13조) ·폐기물 시험 및 분석기관(소각시설)(규칙제45조)

<부록 2>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요령

제정 1999. 5. 10. 예규 제483호  
개정 1999. 10. 21. 예규 제48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실시설계, 마을조성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중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과소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읍·면지역

- (1) 임야율 70%이상
- (2) 경지율 26%이하
- (3) 인구밀도 1.44인/ha이하인 지역

나. 가목이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1)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등 임업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1)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과 연결된 지역
- (2) 영림단 또는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이하 “협업체”라 한다) 등이 조직된 지역
- (3) 임산물의 주산단지인 지역
- (4)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 개발이 가능한 지역

2. “산촌마을”이라 함은 제2조제1호의 산촌지역 가운데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여건과 임업기반이 양호한 법정리·동의 지역을 말한다.

3. “산촌개발대상지”(이하 “대상지”라 한다)라 함은 산촌마을 중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된 마을을 말한다.

4. “산촌종합개발사업”(이하 “산촌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 소득기반 조성, 산촌관광육성 기타 농림업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본계획”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산촌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의 기본방향, 도입시설의 종류 등 산촌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문별, 연도별, 시설별 계획을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등으로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7. “마을조성”이라 함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는 등 마을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관사업”이라 함은 산촌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계 추진하는 다른 부처 소관사업과 산촌개발사업비 이외의 산림청소관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9. “산촌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산촌개발의 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군 행정기관, 대상지 주민, 설계담당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산촌개발의 기본원칙) 산촌개발은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마을의 개발목표와 집중투자방향의 설정을 통해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임업소득원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산촌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4. 산촌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촌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도록 한다.
  5. 생태·환경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4조(적용범위) ①산촌개발의 시행에 관하여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제965

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훈령제948호)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연관사업은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정한 개별사업지침(법, 훈령, 예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용가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 제 2 장 대상지의 결정

### 제 1 절 산촌지역의 조사

제5조(산촌지역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산촌개발과 산촌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촌지역의 토지·마을 및 산림자원의 이용과 개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의 종류는 전국적인 조사, 지역단위 조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촌마을 변경 신청지역 조사가 있으며 산림청장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대상지역,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산촌마을의 지정) 산림청장은 산촌지역의 법정리·동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산촌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산촌마을의 변경) ①시장·군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마을을 해제 또는 추가지정(이하 “산촌마을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촌종합개발 대상지 현황조사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촌마을의 변경신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임업경영기반과 산촌개발의 장기계획을 비교·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2 절 대상지 결정

제8조(신청절차) ①시장·군수는 ‘산촌마을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단위 이상의 다른 개발계획에 의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또는 수년내 개발이 예정되지 않은 지역
2. 주민의 대다수가 산촌종합개발을 희망하고 개발의 의지가 높은 지역
3. 소득수준이 농촌평균소득보다 낮은 지역
4.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

②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산촌개발 대상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촌종합개발 대상지 현황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산촌종합개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신청 대상지를 포함하는 25000분의 1지형도 1부

③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원의 효과, 해당지역의 개발추진 의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지를 상위순위로 정할 수 있다.

1. 임산물 주산단지 또는 특산 임산물이 풍부하여 이용·가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민의 소득증대가 가능한 지역 또는 그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2. 휴양림과 인접한 지역으로 휴양림과 연계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가 가능한 지역
3. 협업체, 영림단 등 임업관련조직이 활성화된 지역
4. 산림휴양자원, 산촌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소득개발이 가능한 지역

제9조(도별사업량 배정)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요건 적합성과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지원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도별사업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지의 결정) 도지사는 산림청장이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지역특성과 제8조제4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대상지를 결정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설 계

#### 제 1 절 설계의 방침 등

제11조(설계의 방침)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이하 “설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연관사업을 포함시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부문의 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의 기간) ①설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대상지로 결정된 다음해(이하 “설계년도”라 한다)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실시설계의 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년도의 9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의 주체) 설계는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거나 농산어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용역업체에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수립은 대학의 연구소 등 용역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에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설계의 기준) 설계에 적용하는 시설 또는 사업비 산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농림사업실시규정 또는 산림청에서 정한 개별사업지침
2. 산촌휴양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요령
3. 정주기반조성: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
4. 기타사업: 해당부처의 개별사업지침

제15조(설계비의 산정) ①설계비는 해당년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연관사업의 유치로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설계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연관사업의 설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설계변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 2 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기본계획 수립 원칙) ①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산촌개발의 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획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
2. 유원지화를 초래하는 산림 또는 계곡내 평상의 설치 또는 먹거리 시설
3. 여관 등의 대규모 숙박시설
4. 마을과 지나치게 유리되어 주민에 의한 일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시설

②기본계획은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지의 중심이 되는 거점 자연부락을 선정하여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은 사업의 내용·성격·규모 및 지원가능한 예산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계획의 내용) 시장·군수는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적, 범위, 기간 등의 개요
2.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방향
3. 사업의 효과
4. 부분별 도입시설계획
5. 도입시설의 타당성 조사(사업수지분석)
6. 투자계획(재원별, 연도별, 사업별, 소관별)
7. 재원조달계획
8.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9.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제18조(과업지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에는 사업개요·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전에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촌개발의 목표와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동판매·가공·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상품의 시장규모, 생산량, 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가급적 유통·가공시설은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과 관련된 품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보고회(중간, 최종 보고회를 포함한다. 이하 “보고회라 한다) 등을 통해 보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촌개발의 목적 또는 사업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입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사업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전에 연관사업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서 3부
2.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 기타 승인조건 등

④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확정된 내용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고·열람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기본계획의 변경) 기본계획의 승인으로 확정된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설의 변경
2.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변경
3.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동

4. 용자사업의 변동
5. 삭제(1999. 10. 21)
6. 개별 사업비 총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사업규모의 변경

### 제 3 절 실시설계

제21조(실시설계) ①시장·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검토사항
2. 설계도면 및 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3. 예정공정표
4. 조감도
5. 요약보고서
6. 기타 시장·군수가 정하는 관계도서

②시장·군수는 실시설계를 확정하기 위해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검수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2조(실시설계의 변경) 실시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공업체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실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 4 장 마을조성

제23조(마을조성) 마을조성은 시장·군수가 직접하거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업체의 선정시에는 농산어촌개발에 대한 경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마을조성기간) ①마을조성은 설계년도 이후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관사업은 해당사업의 시행기간에 따르며 마을조성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②사업시행자는 매년도별로 당해연도에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사업시행계획과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25조(감리)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시장·군수가 직접하거나 감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장관리대장 등) ①시장·군수는 산촌개발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965호) 제39조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주요현황 등을 기록하거나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정산) 보조 및 융자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하며 정산 즉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지 원

제28조(재정지원) ①산촌개발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 2와 같으며, 지원기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②산촌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촌개발사업비로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계획에 의거 시행이 확정된 사업
2.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시설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3.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사업으로 교량, 국도, 지방도에 편입(지정)된 마을 진입도로

③표고자목, 개인주택의 담장, 수도 및 하수도 등의 가정내 소모품 등은 융자금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우선지원)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산림청소관 연관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관계부서는 협의된 지원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시책지원) 지역주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상지 안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산림관계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를 거쳐 우선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사업을 위한 국·공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국·공유림안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공급·알선
3. 새로이 개발한 소득작목(종자·종균 등을 포함한다)의 보급 및 기술 지도 등

제31조(지구 등의 지정)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상지를 다음 각호의 구역 또는 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3.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마을”
5. 기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환경농업지구”

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①공동판매장·저장시설 등 공동시설용지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공동기금형식 등)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산촌개발사업비로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시설의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 6 장 사후관리

제33조(사후관리 원칙) ①산촌개발의 사후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에게 있다.

②시장·군수는 산촌개발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산촌개발의 계획·집행·사후관리업무에 참여한 관계공무원과 설계에 참여한 기관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가 산촌개발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산촌개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주민 또는 마을회에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연관사업의 법령이나 개별사업지침,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는 산촌개발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기계류의 교체시와 사후관리 기간중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주민 또는 마을회에 양도·대여하는 경우
3. 부동산과 그 중물(예, 톱밥공장에 설치된 톱밥기계 등)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4. 임산가공기계류(예, 가건물에 설치된 톱밥기계 등) 등의 동산과 재배하우스, 임간방목시설 및 특용작물재배를 위한 울타리(웬스) 등의 시설은 마을조성기간의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제35조(산촌개발사업 표지판) ①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지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색있게 설치할 수 있다.

②산촌종합개발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에 의거 농림사업안내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산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산림청에 보고할 내용과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체결 상황: 체결후 10일 이내
2. 사업착수 사항: 착수후 10일 이내

3. 산촌개발 추진상황(별지 제4호 서식):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4. 사업비 정산보고: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5.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결과(보완사항 포함): 보고회 종료후 10일 이내
6. 기본계획의 승인: 승인후 10일 이내
7. 대상지 확정: 확정후 10일 이내
8. 기타 중요사항: 수시보고

### 제 7 장 산촌개발협의회

제37조(협의회의 구성)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인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군 관계 공무원(주요 연관사업의 관계관 포함)
2. 대상지 주민대표
3. 설계기관의 설계담당자
4. 기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 등

제38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산촌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보고회 등을 주관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시장·군수와 과업수행자는 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의 검토
2. 연관사업의 지원에 대한 협의·조정
3.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의 사전조정
4. 사업추진 성과의 분석
5. 기타 산촌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마을의 적용례) 별표3의 산촌마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산촌조사를 하거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촌마을로 본다

【별표 1】 삭제(1999. 10. 21)

【별표 2】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내용(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	세부사업내용
보조사업	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li> <li>○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li> <li>○ 진입로, 마을안길 등 교통편의시설</li> <li>○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목공사 등</li> </ul>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조성</li> <li>○ 특산임산물판매장·집하장 등 공동판매·가공이용·저장시설</li> <li>○ 주민요망(숙원)사업 등</li> </ul>
융자사업	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외의 개별 소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간방목, 한봉·양봉, 토종닭 사육 등</li> </ul> </li> </ul>
	주택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신축</li> <li>○ 주택 증·개축</li> </ul>

【별표 3】 경북지역 산촌마을 현황(부칙 제2항 관련)

도	시·군	산촌마을
경북	포항시	죽장면 석계리, 죽장면 봉계리, 죽장면 두마리, 죽장면 하옥리, 죽장면 침곡리, 죽장면 감곡리, 죽장면 상사리, 죽장면 하사리, 죽장면 현내리, 기북면 성법리, 기북면 오덕리, 기북면 탑정리, 장기면 방산리, 장기면 산서리, 장기면 학계리, 장기면 학곡리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양북면 죽전리, 양북면 용동리, 양북면 와읍리, 양북면 안동리, 양북면 임천리, 양북면 송전리, 양북면 두산리, 양북면 용당리, 양북면 구길리, 양남면 신대리, 양남면 효동리, 양남면 상가리, 양남면 석읍리, 양남면 하서리, 양남면 신서리, 양남면 서동리, 양남면 상계리, 양남면 기구리, 양남면 석촌리, 양남면 나산리, 산내면 일부리, 산내면 우리리, 산내면 내칠리, 산내면 강산리, 산내면 내일리, 산내면 대현리, 산내면 신원리, 산내면 외칠리, 내남면 비지리, 내남면 박달리, 내남면 명계리, 내남면 상신리, 내남면 월산리, 내남면 부지리, 내남면 덕천리, 내남면 안심리, 내남면 화곡리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봉산면 신암리, 봉산면 신리, 봉산면 인의리, 봉산면 덕천리, 봉산면 상금리, 봉산면 광천리, 구성면 상원리, 구성면 상거리, 구성면 하강리, 구성면 양각리, 구성면 흥평리, 구성면 송죽리, 구성면 광명리, 구성면 금평리, 구성면 구미리, 구성면 임천리, 구성면 월계리, 구성면 작내리, 구성면 용호리, 구성면 이평리, 대덕면 연화리, 대덕면 중산리, 대덕면 덕산리, 대덕면 가내리, 대덕면 조룡리, 대덕면 추량리, 대덕면 화전리, 대덕면 문의리, 대덕면 대리리, 증산면 평촌리, 증산면 동암리, 증산면 부항리, 증산면 황정리, 증산면 금곡리, 증산면 장전리, 대항면 대성리, 대항면 대룡리, 대항면 운수리, 대항면 주례리, 대항면 덕전리, 대항면 북전리, 조마면 신왕리, 조마면 장암리, 조마면 신안리, 조마면 신곡리, 조마면 상산리, 조마면 대방리, 지례면 관덕리, 지례면 신평리, 지례면 대울리, 지례면 도곡리, 지례면 울곡리, 지례면 여배리, 부항면 월곡리, 부항면 유촌리, 부항면 시좌리, 부항면 이전리, 부항면 하대리, 부항면 대야리, 부항면 회곡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길안면 백자리, 예안면 동천리, 임동면 마령리, 임동면 대곡리, 북전면 매정리, 북전면 사천리, 북후면 신전리, 북후면 석탑리, 북후면 월전리, 서후면 대두서리, 서후면 자포리, 임하면 추목리, 임하면 고곡리, 도산면 가송리
	구미시	옥성면 태봉리, 옥성면 산촌리, 장천면 오로리, 장천면 금산리, 무을면 무수리, 무을면 상송리, 무을면 안곡리, 무을면 오가리, 무을면 무등리, 장천면 옥어리, 장천면 여남리, 장천면 영국리, 옥성면 주아리, 옥성면 구봉리, 옥성면 옥관리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부석면 임곡리, 부석면 북지리, 부석면 용암리, 평은면 강동리, 평은면 천본리, 평은면 용혈리, 순흥면 덕현리, 순흥면 내죽리, 순흥면 배정리, 이산면 내림리, 문수면 승문리, 단산면 좌석리, 단산면 단곡리, 단산면 미락리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신녕면 부산리, 신녕면 화남리, 신녕면 화서리, 신녕면 연정리, 화북면 정각리, 화북면 죽전리, 화북면 상송리, 화북면 입석리, 화북면 용소리, 화북면 하송리, 화북면 횡계리, 화북면 법화리, 화남면 신호리, 화남면 귀호리, 화남면 구전리, 화남면 죽곡리, 화남면 안천리, 화남면 월곡리, 자양면 보현리, 자양면 충효리, 자양면 신방리, 자양면 성곡리, 자양면 용산리, 자양면 도일리, 임고면 수성리, 임고면 삼애리, 임고면 사리, 임고면 효리, 임고면 금대리, 고경면 오룡리, 고경면 고도리, 고경면 삼포리, 고경면 오류리, 고경면 삼귀리, 고경면 부리, 고경면 용전리, 고경면 파계리, 고경면 칠전리, 고경면 논살리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은척면 장암리, 화서면 하송리, 화서면 상곡리, 모동면 수봉리, 화북면 장암리, 외서면 우산리, 외서면 이촌리, 화남면 동관리, 내서면 서만리, 모서면 대포리, 모서면 대포리, 화동면 평산리, 내서면 북장리, 내서면 고곡리, 내서면 서원리, 내서면 노류리, 모동면 상판리, 모동면 정양리, 모동면 신흥리, 모서면 소정리, 모서면 득수리, 모서면 백학리, 모서면 성산리, 모서면 호음리, 화동면 판곡리, 화동면 보미리, 화동면 양지리, 화서면 상용리, 화서면 금산리, 화서면 사산리, 화북면 상오리, 화북면 입석리, 외서면 이천리, 외서면 봉강리, 외서면 백전리, 외서면 대전리, 외서면 예의리, 은척면 봉상리, 은척면 두곡리, 은척면 무릉리, 은척면 황령리, 화남면 중놀이, 화남면 임곡리, 화남면 소곡리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문경읍 상초리, 문경읍 관음리, 문경읍 각서리, 문경읍 하초리, 문경읍 팔영리, 문경읍 당포리, 문경읍 평천리, 문경읍 중평리, 가은읍 원장리, 가은읍 원북리, 가은읍 죽문리, 가은읍 저음리, 가은읍 수예리, 가은읍 상괴리, 가은읍 하괴리, 산북면 김용리, 산북면 전두리, 산북면 거산리, 산북면 석봉리, 산북면 가좌리, 산북면 창구리, 산북면 소야리, 산북면 중곡리, 산북면 내화리, 동로면 생달리, 동로면 명전리, 동로면 석항리, 동로면 간송리, 농안면 내서리, 농안면 궁기리, 농안면 연천리, 농안면 화산리, 농안면 울수리, 농안면 갈동리, 호계면 호계리, 호계면 부곡리, 호계면 선암리, 호계면 지천리, 호계면 봉서리, 마성면 외어리, 마성면 하내리, 마성면 모곡리, 마성면 신현리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용성면 내촌리, 용성면 고죽리, 용성면 송림리, 용성면 덕천리, 용성면 부제리, 용성면 국신리, 용성면 국관리, 용성면 용산리, 용성면 노덕리, 용성면 매남리, 남천면 신방리, 남천면 하도리, 남천면 신석리, 남천면 송백리, 남천면 원리

경북 북부지역 산림 및 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장우환)

도	시·군	산 촌 마 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부계면 동산리, 부계면 춘산리, 부계면 대울리, 고로면 화수리, 고로면 장곡리, 고로면 화북리, 고로면 가암리, 고로면 학성리, 고로면 괴산리, 고로면 석산리, 소보면 산벌리, 소보면 달산리, 소보면 도산리, 소보면 사리, 소보면 보현리, 소보면 북성리, 소보면 위성리, 산성면 백학리, 산성면 운산리, 산성면 삼산리, 산성면 학전리, 효령면 오천리, 효령면 매곡리, 효령면 고곡리, 효령면 노행리, 효령면 병수리, 효령면 불로리, 효령면 화계리, 우곡면 모산리, 우보면 이화리, 우보면 선곡리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옥산면 실업리, 옥산면 감계리, 옥산면 오류리, 옥산면 금학리, 가음면 현리, 가음면 순호리, 가음면 양지리, 안평면 삼촌리, 안평면 신월리, 안평면 석탑리, 안평면 신안리, 안평면 금곡리, 안평면 하령리, 점곡면 동변리, 점곡면 사촌리, 점곡면 황용리, 점곡면 구암리, 단촌면 방화리, 단촌면 구계리, 단촌면 장림리, 단촌면 병방리, 사곡면 매곡리, 사곡면 화전리, 사곡면 신강리, 사곡면 공정리, 사곡면 토현리, 춘산면 금오리, 춘산면 빙계리, 춘산면 신흥리, 춘산면 사미리, 신평면 청운리, 신평면 덕봉리, 신평면 중울리, 안사면 중하리, 안사면 만리, 안사면 신수리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파천면 신기리, 파천면 중평리, 파천면 신흥리, 파천면 어천리, 파천면 송강리, 진보면 괴정리, 진보면 고현리, 진보면 신촌리, 부남면 화장리, 부남면 이현리, 부남면 중기리, 현동면 율매리, 현동면 개일리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영양읍 황용리, 영양읍 현리, 영양읍 감천리, 영양읍 대천리, 영양읍 화천리, 영양읍 무창리, 입암면 양항리, 입암면 대천리, 입암면 금학리, 입암면 산해리, 입암면 병옥리, 청기면 당리, 청기면 정족리, 청기면 기포리, 청기면 저리, 청기면 토곡리, 청기면 구매리, 청기면 도구리, 청기면 무진리, 청기면 행화리, 일월면 도곡리, 일월면 가곡리, 일월면 가천리, 일월면 주곡리, 일월면 오리리, 일월면 용화리, 일월면 문암리, 일월면 칠성리, 수비면 수하리, 수비면 계리, 수비면 본신리, 수비면 오기리, 수비면 신원리, 수비면 송하리, 수비면 소계리, 석보면 옥계리, 석보면 주남리, 석보면 화매리, 석보면 당곡리, 석보면 택전리, 석보면 삼의리, 석보면 요원리, 석보면 흥계리
	울진군	북 면 상당리, 북 면 금성리, 북 면 주인리, 북 면 덕구리, 북 면 두천리, 북 면 하당리, 북 면 사계리, 북 면 소곡리, 서 면 쌍전리, 서 면 전곡리, 서 면 하원리, 서 면 왕피리, 서 면 소광리, 서 면 광희리, 근남면 구산리, 근남면 행곡리, 근남면 수곡리, 온정면 선구리, 온정면 온정리, 온정면 조금리, 온정면 덕산리, 온정면 덕인리, 온정면 외선미리, 기성면 삼산리, 기성면 이평리, 기성면 방울리, 기성면 다천리, 기성면 정명리, 기성면 황보리, 원남면 갈면리, 원남면 금매리, 원남면 기양리, 원남면 길곡리

도	시·군	산 촌 마을
	영 덕 군	남정면 봉전리, 남정면 정암리, 남정면 중화리, 남정면 우곡리, 남정면 남정리, 남정면 회리, 남정면 사암리, 남정면 용덕리, 달산면 옥계리, 달산면 봉산리, 달산면 용평리, 달산면 용전리, 달산면 덕산리, 지품면 도계리, 지품면 옥류리, 지품면 송천리, 지품면 지품리, 지품면 기사리, 지품면 속곡리, 축산면 기암리, 축산면 칠성리, 축산면 조항리, 축산면 대곡리, 축산면 부곡리, 영해면 대리, 영해면 묘곡리, 영해면 원구리, 창수면 갈천리, 창수면 수리, 창수면 삼계리, 창수면 신리, 창수면 창수리, 창수면 보림리
	창 도 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면 마일리, 운문면 오진리, 운문면 방음리, 운문면 공암리, 운문면 지촌리, 운문면 봉하리, 금천면 박곡리, 금천면 김전리, 금천면 소천리, 금천면 오봉리, 각남면 사리, 각남면 옥산리, 각남면 함박리, 매전면 용산리, 매전면 내리, 매전면 두곡리, 매전면 송원리, 매전면 남양리, 매전면 금곡리, 매전면 장현리, 매전면 하평리, 매전면 상평리, 매전면 금천리
	고 령 군	덕곡면 노리, 덕곡면 옥계리, 덕곡면 가륜리, 덕곡면 백리, 쌍림면 용리, 쌍림면 산주리, 쌍림면 산당리, 쌍림면 합가리, 쌍림면 평지리, 쌍림면 율막리, 운수면 팔산리, 운수면 신간리, 운수면 대평리, 운수면 유리리, 우곡면 사천리, 우곡면 속리, 우곡면 예곡리, 우곡면 답곡리, 우곡면 대곡리, 성산면 상용리, 성산면 용소리, 성산면 삼대리, 성산면 대흥리, 개진면 오사리
	성 주 군	가천면 용사리, 가천면 신계리, 가천면 동원리, 가천면 마수리, 가천면 법전리, 수륜면 봉양리, 수륜면 작은리, 수륜면 보월리, 수륜면 신정리, 수륜면 수성리, 수륜면 송계리, 수륜면 남은리, 용암면 상신리, 용암면 죽전리, 용암면 대봉리, 용암면 덕평리, 용암면 본리, 용암면 종거리, 용암면 마월리, 용암면 계상리, 금수면 영천리, 금수면 어은리, 금수면 후평리, 금수면 무학리
	칠 곡 군	지천면 백운리, 지천면 황학리, 동명면 남원리, 동명면 득명리, 가산면 응후리, 가산면 용수리, 가산면 가산리
	예 천 군	보문면 우래리, 상리면 명봉리, 상리면 용두리
	봉 화 군	춘양면 서벽리, 춘양면 애당리, 춘양면 석현리, 춘양면 도심리, 춘양면 우구치리,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승부리, 물야면 오전리, 물야면 개단리, 물야면 압동리, 물야면 복지리, 봉성면 금봉리, 봉성면 우곡리, 소천면 고선리, 소천면 서천리, 소천면 임기리, 소천면 두음리, 소천면 남회룡리, 소천면 분천리, 명호면 북곡리, 명호면 관창리, 명호면 고계리, 법전면 어지리, 법전면 소천리, 법전면 소지리, 재산면 남면리, 재산면 동면리, 재산면 갈산리, 재산면 상리, 상운면 문촌리, 상운면 신라리



## 연구자 소개

---

### ▷ 장 우 환(張宇煥)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 日本 京都大學 農學部 農林經濟學科 초빙외국인 학자(1996)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2003~현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실 실장 역임

#### <주요 연구실적>

-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저서)
- 생태계경영(Ecosystem management), 地方自治時代の 地域農業計劃論(역서)
-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 산림도시 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연구보고서)
- Vision of Forestry and Its Assignment(학회논문)
- 한국의 산촌진흥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학회논문)
- FTA 체결에 대비한 임산물 경쟁력 수준과 수출전략품목 분석(학회논문)외 다수